

여성정책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여성정책 전문가 포럼

일 시 2008년 8월 28

장 소 제주지역경제혁신센터 4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네트워크

프로그램 일정

시 간	구 분	비 고
14:30 ~ 15:00	등 록	
15:00 ~ 15:10	개 회 식	사회 : 정영태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15:10 ~ 16:20	지역 여성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p>사회 : 염미경(제주대학교 교수)</p> <p>발표1: “부산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주경미</p> <p>발표2: “경남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2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의 지역이행 중심으로” - 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 심인선</p> <p>발표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 - 제3차 여성정책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 현황” - 제주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정영태</p> <p>발표4: “경기도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원장 박숙자</p> <p>발표5: “충남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황창연</p> <p>발표6: “전북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 성주류화를 중심으로” -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조경욱</p>
16:20 ~ 16:40	휴 식	
16:40 ~ 17:25	지정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김효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정책전략센터장 (변화순) - 여성부 정책총괄과 (조윤예)
17:25 ~ 17:45	자유토론	참석자
17:45 ~ 17:50	폐 회	

부산시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1)

주경미(부산여성가족개발원)

1.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여성가족정책은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과 법률 및 제도개선 등에 주력해왔고, 여성만의 분야에 집중하였다.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들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그 동안 소홀하게 다루었던 분야, 즉 도시생활의 전반적인 분야(도로, 교통, 문화, 주택 등)에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여성정책분야의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분야에 국한되었던 여성가족정책의 지평을 확대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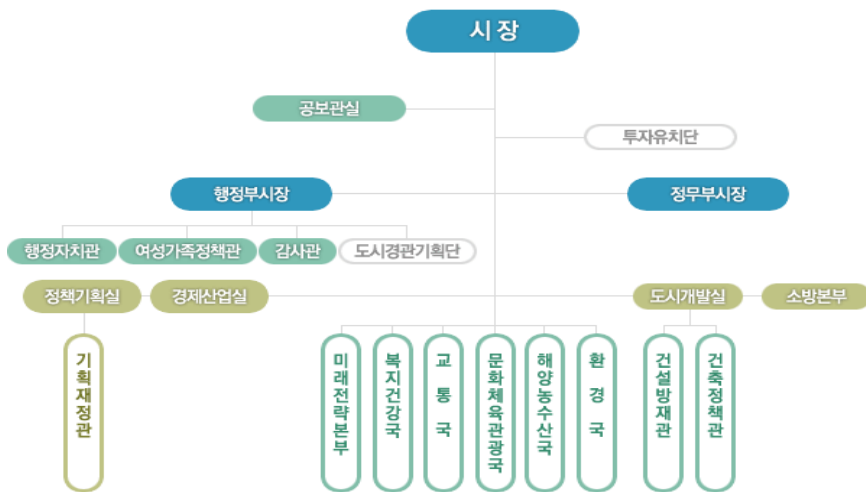
부산시는 2006년 2월, 부산시의 여성가족정책 부서가 보건복지여성국 소속 여성정책과에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정책 업무가 '과 수준에서 국 수준으로'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시정 전반으로 여성가족친화적인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정 혹은 개입할 수 있는 시 본청 조직 내의 위상 제고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부산시 여성가족정책 부서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부산시 여성가족정책의 도약과 발전으로 연결되는 선순환적인 고리를 마련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며, 성 인지적 관점의 주류화의 중요성도 크다고 보여진다.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의 여성정책을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1) 이 글은 부산광역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에서 수행한 『성 인지적 시정운영 방안』(주경미 외, 2007, 여성정책리포트 제10호) 연구보고서에 기초하여 최근 자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였다.

2. 부산시 성 주류화 현황

1) 여성정책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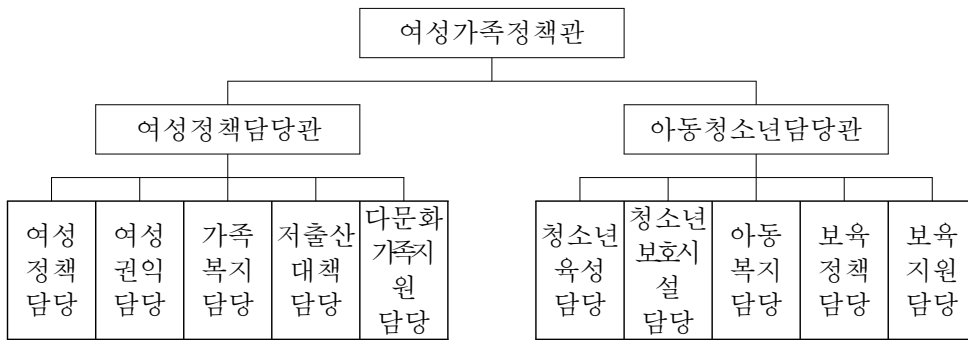
- 부산시의 여성정책 부서의 권한과 위상, 업무영역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1항과 5항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그림1 참조)
- 행정부시장 밑에 행정자치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도시경관기획단·총무담당관·자치행정담당관·국제협력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여성정책담당관 및 아동청소년담당관을 둔다.
- 여성가족정책관은 여성정책·가족복지·저출산대책·다문화가족지원·청소년육성·아동복지 및 보육 관련 업무에 관하여 행정부시장을 보좌하고,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상당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그림 1> 부산시의 행정조직도

-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은 여성정책담당관 아래 여성정책담당, 여성권익담당, 가족복지담당, 저출산대책담당, 다문화가족지원담당 등

5담당을 두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담당관 아래 청소년육성담당, 청소년보호시설담당, 아동복지담당, 보육정책담당, 보육지원담당 등의 5담당을 두고 있다. 2008년 8월 현재 정원은 50명이다.



<그림 2> 부산시 여성가족정책관의 조직 및 업무

- 2008년, 부산시 여성정책 예산은 25,446백만원으로 부산시 전체 예산의 0.4%를 차지한다.

<표 2> 부산시 여성정책 예산

(단위 : 백만원)

년도	부산광역시			여성정책과(B)	여성정책 예산비율(B/A)
	계	일반회계(A)	특별회계		
2000	3,020,045	1,767,774	1,252,270	43,897	2.5%
2005	4,566,732	3,553,506	1,013,225	105,228	2.9%
2008	8,324,418	6,539,350	1,785,067	25,446	0.4%

※ 2006년 2월 市 직제개편에 따라 보육관련업무가 여성정책과에서 아동청소년담당관실로 분리

- 여성정책위원회 등 조정기구

- 부산시는 1994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제정하였다. 1994년 10월부터 부산시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2월 24일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을 계기로 부산시의 여성정책 자문기능에 심의기능이 추가되었으며, 명칭을 여성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다.
- 현재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4장 제27조~제35조는 여성정책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및 서기, 수당 등이 명시되어 있다.

2) 관련 법규와 정책추진 현황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조례는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포함하여 모두 15개의 조례가 있다.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외한 14개의 조례는 다음과 같다.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한부모가족지원기금 조례>,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

합센터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아동보호종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조례에는 성별분리통계구축, 성 인지 예산,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1) 성별분리통계구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10조(성별분리통계구축): 시장은 시와 소속기관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구분하여 구축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는 2005년부터 <부산여성통계>를 발간하기 시작하여 2007년에도 <부산여성통계>를 발간하였으며, 2008년부터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발간을 준비하고 있다.²⁾
- 부산광역시는 제2차 부산여성발전종합계획(2005~2009)에 성 인지 통계 구축을 여성행정부문의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추진계획에는 부산여성통계연보 발간, 지역통계생산자에 대한 성 인지 교육, 성 인지적 지역통계 구축 등이 제시되어 있다.

2) 남녀별 통계 간행물은 광역 자치단체 중 인천시가 가장 먼저 발간하였고(1997년), 다음으로 대구시, 대전시, 제주도가 발간하였음(1998년). 부산시는 2005년부터 발간하기 시작하였음. 2007년 12월 현재, 16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남녀별 통계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음. 기초 자치단체 중 경기도 고양시가 2003년에 처음으로 발간하였음.

<표 2> 지방자치단체 남녀별 통계 발간 현황(2007.12 현재)

구 분	발간물 명칭	최초발간 연도	갱신 연도
서 울	통계로 보는 서울여성	2004	2005, 2006, 2007
부 산	부산여성가족통계연보	2005	2007, 2008
대 구	대구여성통계	1998	2005
인 천	인천여성통계	1997	1998, 1999
광 주	광주여성통계	1999	-
대 전	대전여성통계	1998	2003, 2005
울 산	울산여성가족통계연보	2007	-
경 기	경기여성가족통계	2000	2003, 2006
강 원	강원여성통계	2003	2005
충 북	충북여성통계	1999	2005, 2007
충 남	충남여성통계	1999	2001, 2003, 2005
전 북	전북여성통계	1999	2001, 2003, 2005
전 남	전남여성통계	2004	-
경 북	경북여성통계	2001	2004
경 남	경남여성통계연보	2004	2005
제 주	제주여성통계연보	1998	2002, 2004
고양시	고양여성통계	2003	-

(2) 성 인지 예산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여성정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성 인지 예산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대상 사업을 확대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방정부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고 있다.
- 향후 지방재정법이 바뀌게 되면 부산시에서도 자치법규 개정, 성 인지 예산 편성 지침 마련, 성 인지 예산 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3) 성별영향평가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9조(예산·정책의 수립 등)

② 시장은 소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당해 정책이 여성과 남성에
게 가져올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의
차원에서 수립·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 여성가족정책관실이 본청 및 구·군청의 성별영향평가에 대해 총괄 관리하고 있다.
- 부산시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부산시 본청의 경우, 2005년 1건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3과제, 2007년 6과제, 2008년에는 30과제로 점차 평가대상 정책의 수를 늘려나가고 있다.
- 구·군은 2006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시작하여 2007년에는 구·군 1곳 당 평균 3개의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부산시 교육청은 2007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다.

<표 3> 성별영향평가 실시 현황(부산)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본 청	0	1	3	6	30
구·군	0	0	7	54	
교육청	0	0	0	1	
계	0	1	10	61	

- 그 동안 부산시에서 수행한 성별영향평가는 실시 기관이 확대되고, 수행 과제수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부산시의 성별영향평가가 확대 추세이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다수 발견된다.
-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차년도 예산편성에 반영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가고 있다. 하지만 부산시의 경우,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부산시의 문제라기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부산지역에서는 본원이 주축이 되어 부산시의 성별영향평가를 성인지 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기초적인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이 확대되고, 수행과제수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산시 본청을 비롯하여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성별영향평가 수행기관의 과제선정부터 진행 및 평가 결과의 환류에 이르기까지 성별영향평가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다.

(4) 성 인지 교육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13조(양성평등의식의 제고)

② 시장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등에 여성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에 평등의식제고를 위한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는 공무원 대상으로 양성평등 교육과 성 인지 교육현황을 실시하고 있다. 공무원 대상의 성 인지 교육은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의 자체교육 프로그램이나, 부산시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부산여성가족개발원에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다.(표4 참조)

<표 4> 성 인지 교육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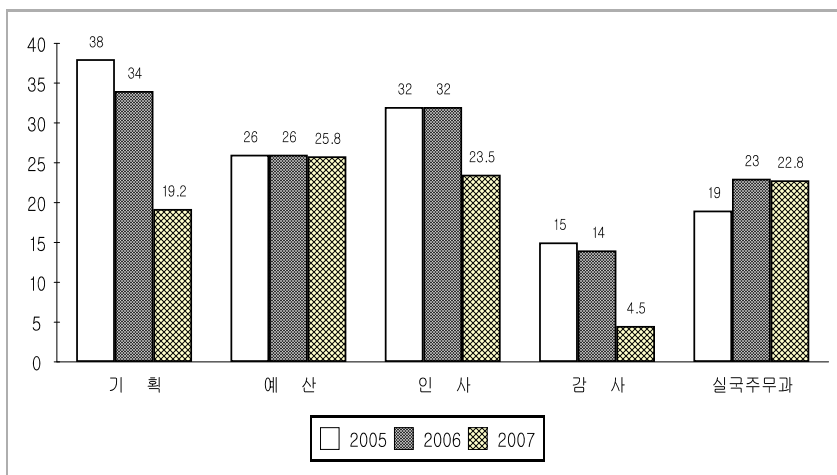
구분	교육횟수	교육인원
2003	13회	560명
2004	15회	600명
2005	16회	700명
2006	18회	750명
2007	20회	800명
2008	21회	850명

3) 여성의 대표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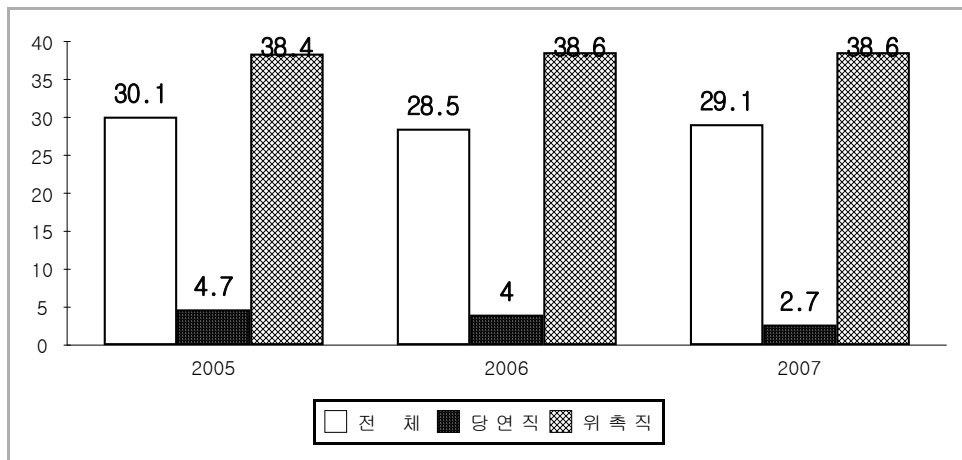
부산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제5조(적극적 조치) 부산광역시장 및 소속기관·투자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장등"이라 한다)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재정적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공직참여 촉진) ①시장은 공직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 시험에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부산시의 여성공무원 수는 2007년 현재 879명으로 전체의 21.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의 5급 이상 공무원 444명 중 여성은 23명으로 5.2%에 불과하며 여성공무원은 6급 이하의 하위직에 분포해 있다.
- 부산시의 공무원 채용시험에 합격자는 221명이고 이중 여성은 123명으로 55.7%이다. 이 중 7급 합격자 13명 중 여성은 6명(46.2%)이고, 8급 합격자 5명 모두 여성이다.

- 부산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2004년 27.9%, 2005년 21.0%, 2006년 24.0%, 2007년 20.8%로 증감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관실은 여성공무원 수는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3명(34.0%)이지만 2007년 5명(19.2%)감소하였고, 예산부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인사부서의 경우 2005년 18명에서 2006년 19명으로 1명 증가하였지만 2007년에는 8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인원이 감소한 것도 있지만 여성 감소는 더욱 두드러져 2006년의 여성비율 32.0%에서 2007년에는 23.5%에 그치고 있다. 감사관실의 경우에도 여성공무원 수는 2005년 7명(15.0%), 2006년 7명(14.0%)이었으나 2005년에는 2명(4.5%)에 그치고 있다. 기타 실국주무과의 여성공무원은 2005년 95명(19.0%)에서 2006년 119명(23.0%)로 증가하였으며, 2007년 22.8%로 전년도와 비슷하다.



<그림 3> 부산시 주요부서 여성공무원 현황(%)



<그림 4> 부산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여성비율(%)

- 부산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은 285명으로 전체 위원의 29.1%를 차지한다. 이는 전년도인 28.5%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것이다. 당연직의 경우 여성위원이 7명으로 전체의 2.7%에 그치는 반면, 위촉직은 여성위원이 287명으로 38.6%로 나타났다. 구·군별로 보면 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이 30% 이상인 곳은 연제구(35.5%), 사하구(32.7%) 두 곳이고, 여성참여율이 20% 이하인 곳은 중구(19.6%), 동구(14.9%), 강서구(10.7%) 등 3곳이다.

4) 부산시 공무원 및 지방의원의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이해

○ 설문조사 개요

- 시정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시정에 대한 의결·입법·감시를 하는 지방의원의 성 인지 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성 인지적 시정운영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2007년 11월 7일부터 30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는 공무원 248명(시본청 104명, 구·군청 144명), 지방의원 115명(시의원 21명, 구의원 94명) 등 총 3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SPSS P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설문내용은 성 인지 용어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성 인지 정책의 필요성 및 시행여부에 대한 질문, 양성평등 교육 경험 등으로 구성하였다.

○ 설문조사 결과

- 양성평등을 위한 성 인지 정책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상대적으로 오래 시행되어온 정책(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주간, 여성발전기본조례 등)에 대한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다.
- 성 인지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인지도는 높게 나타났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번거롭고 이미 남녀 모두 정책 대상자이므로 굳이 성별로 구분하여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나타났다.
- 성별분리통계,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의 시행에 대해 공무원의 과반수가 시행하기 힘들다고 응답하였고, 시행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공무원의 대다수도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진 후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 공무원과 지방의원 모두 성 인지 정책 시행을 위해 공무원의 성 인지력 향상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양성평등교육을 확대·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양성평등교육을 받은 응답자 중 대부분이 성 인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지만 업무에 도움은 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많으므로 향후 성 인지 정책을 시정 전 분야에 확대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교육을 수준 별, 영역별로 세분화하고 전문화하여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시정을 의결·입법·감시하는 지방의원도 양성평등교육이나 성 인지 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 성 인지력을 향상하고, 정보를 취득하여 보다 성 인지적 시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여성정책은 여성만이 대상이라는 인식의 한계를 보이고 있어 체계적인 성 인지 교육·정책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

3. 부산시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1)남녀별 통계 구축

- 지금까지 부산시 본청, 구·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투자기관, 유관 기관 등에서 작성해왔던 각종 통계(행정통계 포함) 중 사람과 관련된 것은 남녀별 통계를 작성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한 부산시가 외부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발주하는 용역성 연구과제(법정 기본계획 수립, 수탁과제 등)를 수행할 때 사람과 관련된 것은 남녀별 통계를 작성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 부산시가 매년 발간하는 「부산통계연보」 중 인적 통계, 즉 단위가 사람인 경우에는 남녀별 통계를 수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통계청,

중앙부처 및 중앙정부기관 등에서 남녀별로 구축한 통계가 부산통계연보에서 합쳐지는 사례가 발견되며, 특히 인구 및 경제 관련 통계에서 이런 현상이 다수 발견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부산통계연보에 수록된 행정통계 중 부산시 본청 및 유관기관에서 생산한 통계가 성별로 분리되어 있지 않는 것이 다수 발견되므로 시정이 필요하다.

2)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및 실효성 확보

- 여성부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기관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2008년에는 기초자치단체, 2009년에는 중앙 및 지방소속기관, 2010년에는 입법, 사법, 헌법기관, 2011~2012년에는 공기업 등 공공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여성부에서 제시한 네 가지의 우선 적용 대상 정책³⁾을 고려하여 부산시의 우선 대상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비전을 제시하는 큰 계획으로는 부산발전 2020 비전과 전략, 시민공원조성 사업 등이 있다. 또한 각종 중장기 기본계획으로는 교통, 관광, 도로, 복지 등과 관련된 기본계획이 있고, 성별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으로는 10대 전략산업, 누리사업 등이 있다.
-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사후평가 뿐 아니라 사전평가를 통해 정책이 계획될 때부터 성 차별적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종 시민공원 조성사업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거나 시행하기 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정책이 성 평등 방향에서 기획·수행되도록 하는 필요하다.
- 성별영향평가 대상정책 및 평가대상 기관의 확대에 앞서 이들 기

3) 첫째, 관련 통계상 정책 수혜도의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정책, 또는 앞으로 성별 격차 발생 우려가 있는 정책 둘째, 예산 규모가 크며 시민의 관심 사항이 되는 정책 셋째, 수혜 대상 범위가 넓으며 파급 효과가 큰 주요정책 넷째, 중장기 발전계획에 반영된 주요정책이나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정책 등이다.

관이 성별영향평가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별영향평가센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센터를 통해서 본청 및 구·군청에서 수립하는 각종 법정계획 및 주요 중장기 계획에 남녀별 통계,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수립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성 인지 예산 도입

- 지방자치단체에도 성 인지 예산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이 검토 등을 추진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연구기관에서 준비하고 있는 성 인지 예산·결산제도 시행 관련 작업을 토대로 향후 부산시는 ‘가칭 부산시 성 인지 예산 준비 협의체’ 운영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성 인지 예산 도입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 중앙부처에서 작성한 예결산서 등을 분석하여 직원용 매뉴얼 작성 및 직원 교육 등을 준비해야 한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시행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성 인지 예산 프로그램의 연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성 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제도 도입 시 원활한 협조와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이는 성별영향평가 교육과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성 인지 교육 확대 및 체계 정비

- 설문조사 결과, 여성정책은 여성만이 대상이라는 인식상의 한계가 드러났으므로 체계적인 성 인지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산시 공무원교육원을 중심으로 공직자 대상의 다양하고 체계적인 성 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공무원교육원 이외에도 부산여성가족개발원을 중심으로 공무원, 지

방의원, 유관기관 종사자,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성 인지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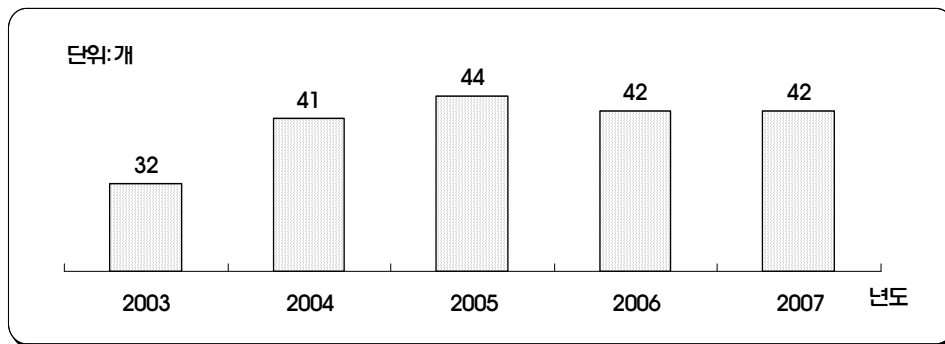
- 성 인지 교육 확대와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는 성 인지 정책 지침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여성들끼리만 무엇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었지만 여성들끼리만 무엇을 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시정운영에 여성 및 가족친화적인 공간, 사회문화, 경제, 생태 등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기획 단계부터 수행 및 결과의 환류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성 인지적 관점이 전면 도입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작지만 당장 시행 가능한 일상생활의 불편사항을 상시 발굴하고 즉각 시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제도적인 변화, 시스템의 마련은 대단히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하지만 당장 시행 가능한 작은 것을 발굴하고 즉각 시행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한다. 가령 도로, 교통, 공공건물, 편의시설, 공원, 여가시설,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불편사항을 상시 접수하고 즉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상남도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경남발전연구원 여성정책센터장 심인선

1. 경상남도 여성정책 현황

- 경상남도는 제2차 여성발전기본계획(2003~2007)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여 매년 보고함
- 이 기간 동안 수행한 과제에 대한 경상남도의 여성관련 정책을 여성발전기본계획의 과제번호에 따라 정리한 것이 <표 1>과 같음
- 매년 여성정책과에서 경상남도의 여성발전기본계획추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07년을 기준하여 약 437,758백만원 정도가 집행되었고, 이 정책의 직접 수혜자는 449,128명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성발전기본계획에 따른 과제 및 특수시책 과제수는 2003년 32개에서 2005년 44개로 가장 많다가 2006년과 2007년도에는 42개로 같음



(그림 II-20) 여성정책기본계획 과제수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과제 번호	과제명	2003			2004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1-2-1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38			14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1,081			144	
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2-1-2	지방공무원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45%			40%	
2-1-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실시		17.70%			19.50%	
2-1-6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25.60%			34.80%	
2-2-2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강화	120	1,126		156	2,215	
3-2-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육성 기반 조성	31	43,340	84		32,359	
3-2-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12,262		265	16,134	
3-2-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7,928	9,172	37	11,622	40,725	
3-2-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3-1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3-3-3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지원	1,544		308	148,122	305	
3-3-4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3-4-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위민넷 운영		10,000			10,000	
3-5-1	여성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22,114	19		47,662	
3-5-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4-2-2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		13		17	15	
4-3-4	여성근로자 능력개발기회 확대	351	36,479	3	825	16	
4-3-5	여성고용촉진 기반구축	125		3	461	2,072	
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768	4,012	1,185	25,950	19,083	
4-6-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2,000	533	158		71,109	
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42,170	32,893	1,695	62,529	34,112	
4-6-4	직장보육의 활성화					611	
5-1-1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179			392		
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성 추진				3,892		
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확대				3,500	112	
5-2-1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19	400		146	192	
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5,821	3,562		5,827	6,829	
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1	1		1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2,018		
6-3-4	모성 건강증진대책 강화		2			2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계속)

과제 번호	과제명	2003			2004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9	4,789		465	90,121	
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1	1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2,120			2,432		
6-3-4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7-1-2	모성 건강증진대책 강화	1,191	61,754	5	473	10,770	
7-2-1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	5,552	1,358	533	24,350	9,670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신규)	3,786	378,000	19	223	400	23
7-3-2	여성노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1,549	43	8,022	1,650	17
7-3-3	노인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 구축(신규)	-			-		
7-4-1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100	610	32	375	900	42
7-4-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25.7	65		40	100	
7-4-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			-		
8-1-1	성 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강화	744	280	4	1,021		4
8-1-3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200	20	50		
8-2-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1,994	58	82	1,735		60
8-2-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255	40	80		
8-3-3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21			20	21
9-1-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서비스 지원	100		1	971	50	4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 교육 실시		110		45	6,280	
10-1-2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42	4		95	1,120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 운동추진	41	1,900				
특수시책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 교육	120	120				
특수시책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80	100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계속)

과제 번호	과제명	2005			2006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집행액	정책수혜 자	사업장수
1-2-1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132			-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 성화	32	268		19	1,276	
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4.2%			4.50%	
2-1-2	지방공무원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48%			49%	
2-1-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실시		20.90%			21.80 %	
2-1-6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35.50%		10	38%	
2-2-2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강화	143	1,232		80	6,315	
3-2-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육성 기 반조성		46,477		62	63,639	1
3-2-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53	62		151	77	
3-2-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 강화	14,631	53,609	5	7,751	10,127	6
3-2-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 라 확충				-		
3-3-1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38,292		176
3-3-3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지원	16,731		142	76,492		322
3-3-4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82,497		
3-4-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위민넷 운영		10,000				
3-5-1	여성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3-5-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1,045	7,776	5	1,293	5,800	7
4-2-2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	4	14		7	12	
4-3-4	여성근로자 능력개발기회 확대						
4-3-5	여성고용촉진 기반구축						
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73,353	52,203	1,986	87,419	4,717	1
4-6-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80,958	2,222	90,385	67,842	2,414
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89,781	57,517	1,713	147,298	35,939	105
4-6-4	직장보육의 활성화		611	13		611	14
5-1-1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458			213		
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 율성 추진	379			213		
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확대		2,200				
5-2-1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11	90		44	640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계속)

과제 번호	과제명	2005			2006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9	4,789		465	90,121	
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1	1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2,120			2,432		
6-3-4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7-1-2	모성 건강증진대책 강화	1,191	61,754	5	473	10,770	
7-2-1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	5,552	1,358	533	24,350	9,670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신규)	3,786	378,000	19	223	400	23
7-3-2	여성노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1,549	43	8,022	1,650	17
7-3-3	노인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 구축(신규)	-			-		
7-4-1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100	610	32	375	900	42
7-4-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25.7	65		40	100	
7-4-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			-		
8-1-1	성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지 원 강화	744	280	4	1,021		4
8-1-3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200	20	50		
8-2-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 귀 지원	1,994	58	82	1,735		60
8-2-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 화		255	40	80		
8-3-3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21			20	21
9-1-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서비스 지원	100		1	971	50	4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 교육실시		110		45	6,280	
10-1-2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42	4		95	1,120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 운동추진	41	1,900				
특수시책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 교육	120	120				
특수시책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8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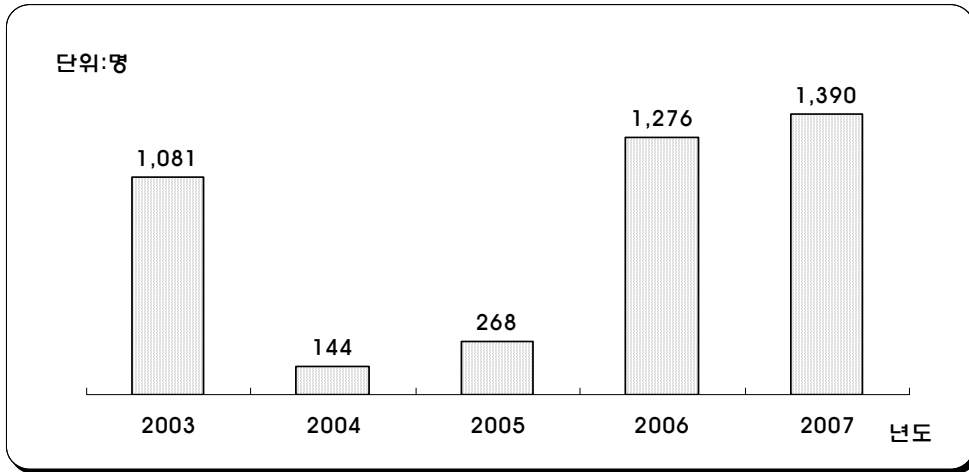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계속)

과제 번호	과제명	2007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1-2-1	여성정책평가 및 정책의 성별분석제도 구축	15		
1-2-2	성인지적 통계생산 및 보급	135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17	1,390	
2-1-1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 시행			
2-1-2	지방공무원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추진		30%	
2-1-3	여성공무원에 대한 적극적인 인사관리 실시	25		
2-1-6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 확대	10	40%	
2-2-2	여성의 정치참여를 위한 지원강화	60	120	
3-2-1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제고 및 전문인력육성 기반조성	62	41,655	
3-2-2	여성농업인의 대표성 제고 및 지위향상	114	34	
3-2-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농촌정주를 위한 지원강화	15,896	8,721	6
3-2-4	여성농업인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			
3-3-1	여성의 창업분위기 조성			
3-3-3	여성기업 자금조달 원활화 및 경영개선지원	100		30
3-3-4	여성기업의 판로개척 지원			
3-4-3	여성을 위한 공공사이트 위민넷 운영			
3-5-1	여성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3-5-2	여성평생교육기관의 차별화·특성화	1,416	6,500	8
4-2-2	육아휴직제도의 조기 정착	25		
4-3-4	여성근로자 능력개발기회 확대			
4-3-5	여성고용촉진 기반구축			
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101,588	135,203	2649
4-6-2	수요자 요구에 따른 다양한 보육서비스 확충	107,523		398
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확대	157,996	143,921	12048
4-6-4	직장보육의 활성화			11
5-1-1	여성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	233		
5-1-2	여성단체 등과의 협력강화를 통한 여성정책의 효율성 추진	233		
5-1-3	여성정책 추진과정에 여성단체 참여확대			
5-2-1	여성자원봉사 전문성 강화	43	600	
5-2-2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	410	90,030	
5-2-3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5-3-2	여성참여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2,608		
6-3-4	국내외 여성네트워크 활성화			
7-1-2	모성 건강증진대책 강화	1,614	14,001	12

<표 1> 연도별 정책과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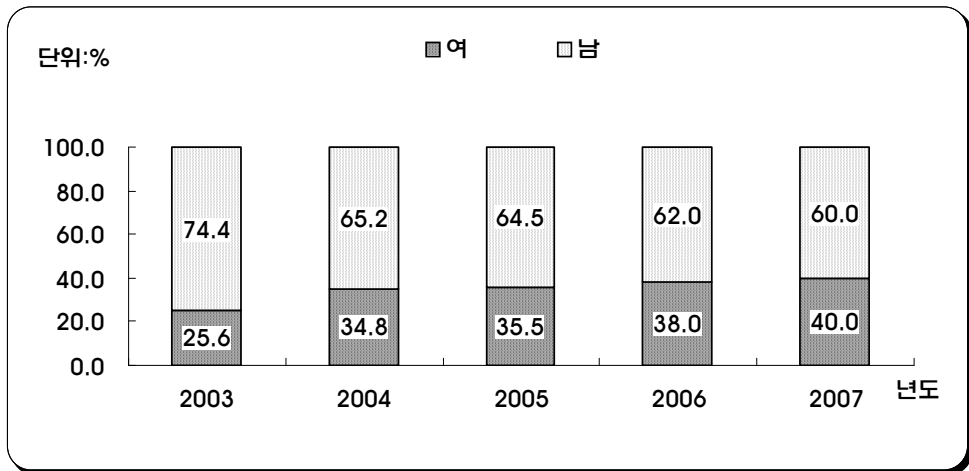
과제 번호	과제명	2007		
		집행액	정책수혜자	사업장수
7-2-1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자립지원	28,918	4,425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신규)	184	400	2
7-3-2	여성노인의 복지서비스 강화	13,649	1,600	15
7-3-3	노인복지관련 성인지적 통계 구축(신규)	-		
7-4-1	여성장애인의 취업능력 제고	390		13
7-4-2	여성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40	100	
7-4-3	장애인복지 관련 성인지적 통계구축			
8-1-1	성 매매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지원 강화	1,029		4
8-1-3	성매매 예방 및 인식의 제고	66		
8-2-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1,955		42
8-2-3	가정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강화	104		
8-3-3	성희롱 예방교육 체계화		25	
9-1-1	통합적 가정(가족)복지서비스 지원	1,260	100	46
10-1-1	대상별로 전문화된 남녀평등의식 교육실시	30	300	
10-1-2	남녀 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70	3	
10-1-3	생활속의 평등문화 확산 운동추진			
특수시책	경남여성지도자 양성과정 대학위탁 교육			
특수시책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 주요과제의 집행액 또는 정책수혜자의 추이는 다음과 같음
- 공무원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참여인원은 2004년과 2005년도에 저조하다가 2006년도부터 많아지는 추세임



(그림1) 1-2-3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 활성화 참여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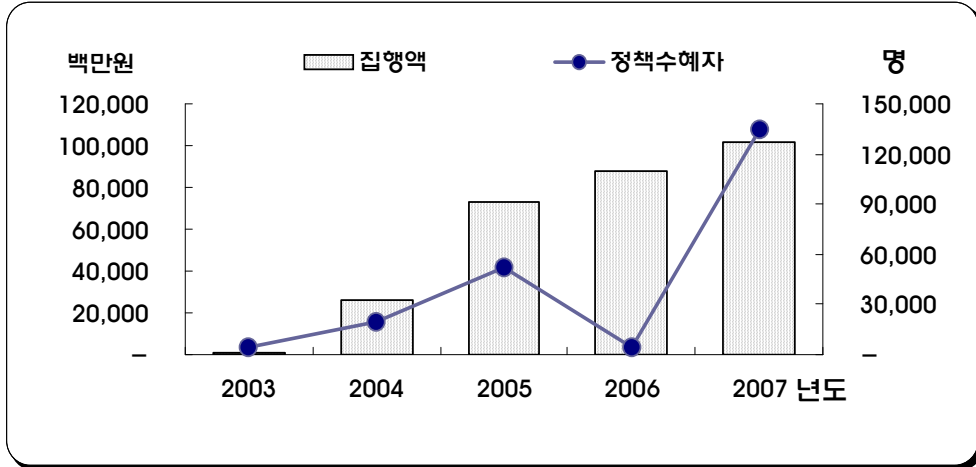
- 경상남도내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참여 비율은 2003년도 25.6%에서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보여 2006년도에는 38.0%로 12.4%p 증가하였고, 2007년도에는 40%를 목표비율로 정함



(그림2) 2-1-6 여성위원참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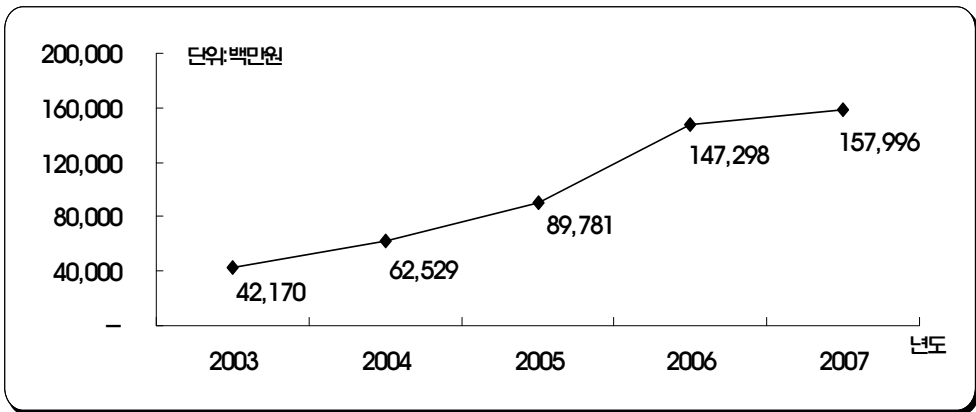
- 보육인력 전문성 향상 및 보육환경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과 저소득 계층

영유아를 중심으로 보육료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비 및 정책수혜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07년도에는 101,588백만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함



(그림3) 4-6-1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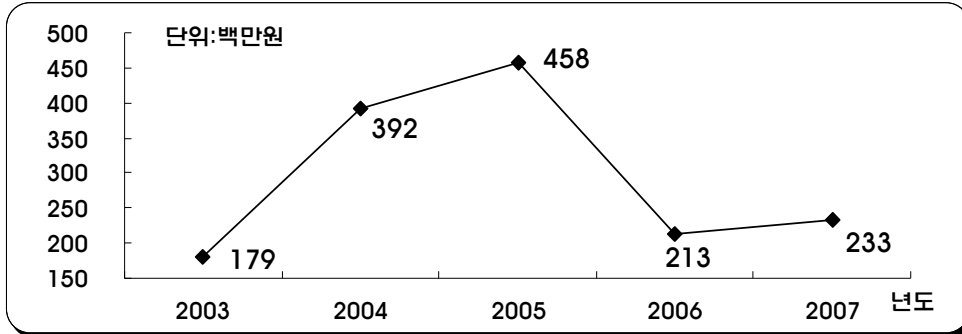
- 또한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역시 확대되어, 2003년도 42,170백만원이었던 투자비가 2007년도에는 157,996 백만원으로 증가함



(그림4) 4-6-3 보육에 대한 공공투자 집행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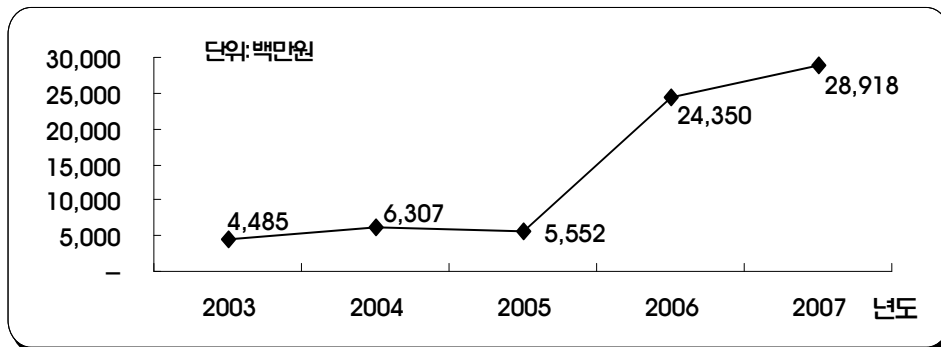
-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금은 2005년도에 458백만원으로

가장 많이 집행하였고 2006년·2007년도에는 2억원 가량으로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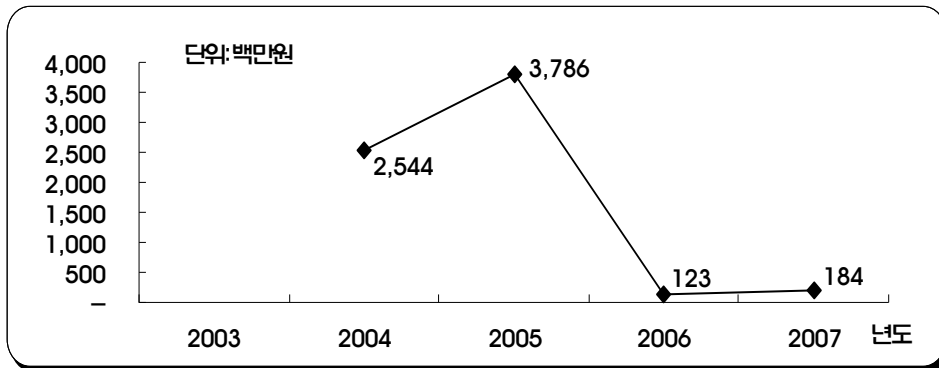
(그림5) 5-1-1 여성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및 보조금 집행액

- 취약계층 자활을 위한 자립 지원비가 2006년 이후로 많이 증대되어 2003년도 4,485백만원에서 2006년도에는 5배 가량 증가한 24,350백만원으로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인한 저소득층 자활 지원비가 증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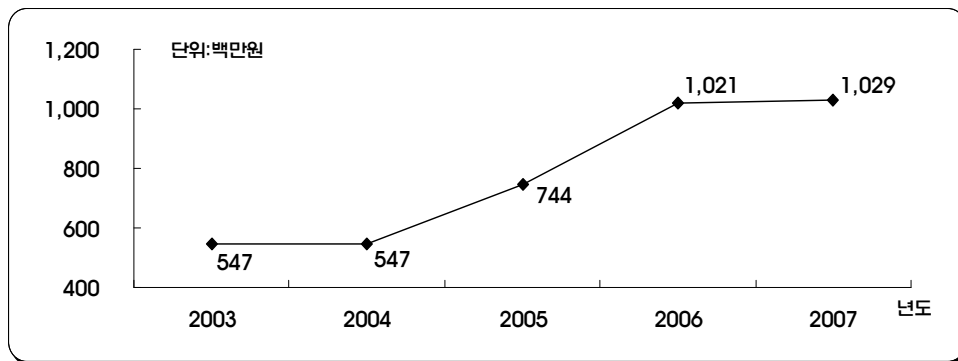
(그림6) 7-2-1 취약계층 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집행액

- 2004년도에 신설된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를 위한 사업은 2005년도 확대되었다가 2006년도 이래로 축소되어 운영됨



(그림7) 7-3-1 여성노인의 취업능력제고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의료·법률·취업훈련 등 각종 지원 강화를 위한 사업은 점차로 확대되는 추세임



(그림8) 8-1-1 성매매 관련 여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강화

2. 경상남도 여성정책 분석

- 지난 5년간 경남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준하는 경남여성정책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왔으나, 국가와 지자체 여성정책 환경 등의 급속한 사회여건 변화로 지역여성의 요구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 공무원의 성 인지적 정책형성 교육·훈련의 경우 2006년부터 증대된 것으로 보이나 일반직 및 행정능력 향상 훈련과정에 참여한 자가 다수로, 실

질적인 성 인지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2006년도 이행실적을 기준으로 양성평등정책형성과정과 성 인지력 향상
과정에 각각 25명·27명 등 50명 내외가 실질적인 성 인지적 정책형성 훈
련을 받은 것으로 보여짐

- 성 인지 정책형성을 위한 법제도가 2002년 이미 수립되었고 2010년부터
본격적인 성 인지예산 수립 및 성별영향평가를 시행하여야 하므로 공무
원의 양성평등 정책분석 훈련 및 성 인지적 정책형성 기법 훈련이 요구
됨
- 보육예산비 확대, 취약계층 여성 자활지원비 증대 등은 매우 바람직한 현
상으로 향후에도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여성노인의 취업관련 사업은 오히려 축소하여,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여성노인 정책 부재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됨
-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관련 정책의 확대가 요구됨
- 여성의 경제활동활성화와 관련한 지나 5년간 사업은 세부사업이 많지 않
고 다소 산발적인 경향을 보임
- 이번 중기계획에서는 영역별로 사업을 세분화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발전
적인 성과를 통하여 경남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함에 목적
을 둘 필요가 있음

3. 여성정책의 방향

- 위와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경남의 2008년도부터 5년간 시행될 '경남여성
정책중기계획'은 정부의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연동하나, 지역적 특성을 반
영하여 다음과 같이 정책추진 체계를 정함

활기찬 여성이 함께 만드는
세계 속의 경남

전략
메뉴

여성의 역량강화

일과 생활의 조화

다양성 존중

정 책 과 제

1.사회체 운영에 주도적 참여	2.여성의 복지와 인력 강화	3.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4.물품의 사회적 분담과 자출산 대응	5.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함께 참여하는 도정 운영	여성의 복지실현과 인권보호 체제 강화	여성이 함께 알하는 풍요로운 경남	함께 돌보고 서로 분담하는 경남	평등문화의 확산과 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주류화 추진 기반 조성 •여성의 대표성 제고 •시민사회와 발전적 파트너십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통한 건강증진 강화 •취약계층여성의 복지서비스 확대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상폭력 가정폭력 방지 정책 실효성 제고 •성희롱 방지와 구제의 전문체계 구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및 고용안정성 보장 •여성 취업기반 마련 •다양한 여성일자리 확대 •여성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확대 •직장내 가정 양립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육서비스 내실화 •자출산의 체계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한 평등문화 실현 •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보급 및 활성화 •성평등교육 활성화 •문화적 다양성 증진기반 구축

(그림9) 계획의 목표 및 정책과제

- 1) 지자체 운영에 주도적 참여
 -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 성별분리통계 생산,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정책 교육 강화를 통해 지자체정책의 성 주류화
 - 의사결정과정 참여확대를 위한 잠재적 장애요인 제거와 적극적조치 시행
 - 지자체 정책과정에 여성NGO 등을 포함한 지역 여성 참여 기회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고양

-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 여성노인·장애인·한 부모 가족·빈곤여성 등 사회적 취약집단 증대에 따른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 성·가정폭력 등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적극 대처하고 여성인권 보호체계를 구축
 -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지원을 통한 성매매 방지 정책 일관 추진

- 3)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지속 확대를 위한 견고한 여성일자리 확대
 - 분야별·대상별 여성인력의 직업능력 향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 직장 내 여성 근로자에 대한 차별해소와 비정규직 등 여성에게 특히 불리한 근로조건 개선

- 4) 돌봄의 사회적 분담과 저출산 대응
 -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의 양육부담 경감
 - 가정내 양육·노인 수발 등 가족 돌봄 기능에 대한 사회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고 지원시스템 구축
 - 일-가정 양립을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여건 개

선과 사회 환경 조성

- 저출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적 부담 경감, 가정-직장 양립 환경조성, 출산력 안정화를 위한 방안 모색

5) 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 미디어와 교육을 통한 양성평등문화 확산으로 가족과 사회 전반의 평등문화 정착
- 구성원들의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사회통합 달성
- 도농간 여성의 문화적 격차 해소를 위한 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 수립에 따른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

정영태(제주발전연구원 초빙연구원)

2006년 7월 1일 제주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지방자치역사에 있어 새로운 획을 긋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하였다. 도 단일 광역체제와 특별법을 통해 출범한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통하여 단계적인 자치권을 확보하였다. 제 1단계 특별법 제정을 통해 1,062건의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07년 제2단계 제도개선을 통하여 278건이 개선되어 “4+1의 핵심산업”에 대한 차별화 확대 등을 이루어왔다.

이러한 지역의 변화를 바탕으로 여성정책 역시 많은 변화를 하여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은 제2차 여성정책계획(2003~2006)이 완료됨에 따라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여성정책에 대한 욕구들이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다양한 욕구들을 수렴하면서 제주여성정책은 제주 여성의 욕구를 기본으로 현재까지 추진된 여성정책의 성과를 명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지표의 설정에서부터 출발을 하였다.

또한 제주 여성으로서의 해녀정신과 만덕정신을 바탕으로 여성이 살기 좋은 제주특별자치도로 나아가고자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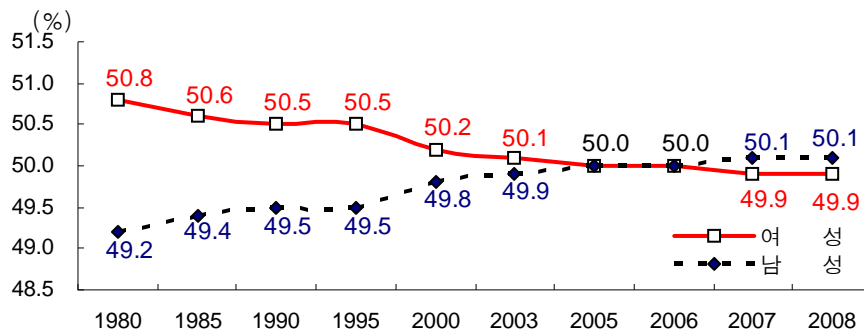
본 논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여성 통계와 현황을 바탕으로 정책의 성주류화 확산은 물론 양성평등 정책의제 발굴 등 제주 여성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여성 통계와 특성

1) 인구

2008년 여성인구는 272,060명, 남성인구는 273,408명으로 남성이 1,348명이 많다. 제주는 여성 인구비율이 높아 “女多島”⁴⁾로 알려져 있었으나 2005년부터 서서히 여성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로 성별 구성비에 있어 남성이 50.1%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남녀별 인구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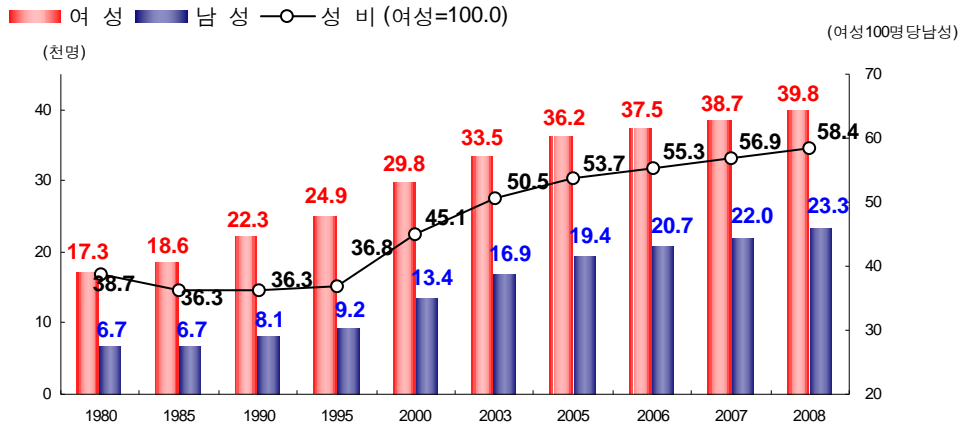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 여성의 삶. 2008. 7. 15 보도자료

그러나 전체 인구 구성에 있어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의 이상의 인구는 여전히 “女多”로서 여성이 63.1%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90년 73.4%에 비하여 10.2%가 감소한 것으로 제주도의 역사적 배경을 감안하면 연령이 증가하면서 벌어진 성비격차는 서서히 감소할 전망이다.

4) 제주는 三多로 石多(돌), 風多(바람), 女多(여자)가 있다. 이를 빗대어 三多島로 불렀다. 바람은 자연환경으로 태풍의 길목이기 때문에 바다와 바람이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고, 화산활동에 따른 돌덩이가 제주의 자연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자원이며, 삶의 현장을 함께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女多는 남자들이 어로작업에 따라 여자의 숫자가 많은 것에서 연유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어업, 농업 등 강한 노동활동을 함께하는 여성을 비유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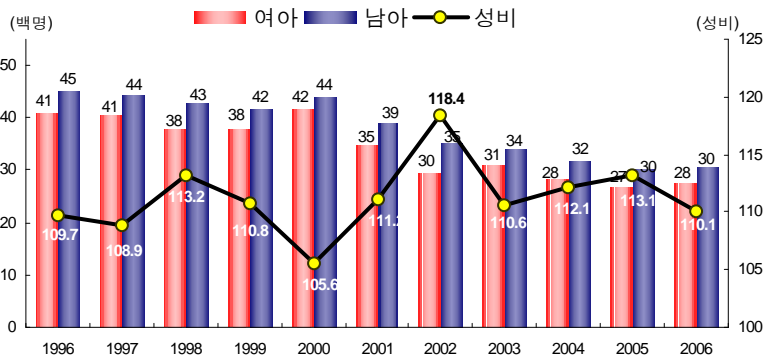
<그림2> 65세 이상 인구추이



출처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 여성의 삶. 2008. 7.15 보도자료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주의 출생아에 있어 여아의 출생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2년 118.4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 출생성비는 105.7로 전국에서 대전 104.2, 경기 105.2에 이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성별 출생아수 및 성비



출처 : 통계청 제주통계사무소, 2008 통계로 본 제주 여성의 삶. 2008. 7.15 보도자료.

또 한가지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산모의 고령화를 들 수 있다. 제주도는 2006년까지 1.3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냈으나 2007년 발표자료에 따르면 전남, 충남에 이성 1.48명으로 전국 1.26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연령이 30세 이상의 출산율이 20대 보다 훨씬 높음에 따라 제주 지역 출산문화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1> 시·도별 모(母)의 출산연령

(단위: 가임여성 1명당 명, 해당연령 여자인구 1천 명당 명)

	합계출산율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						
		순위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전 국	1.26		2.3	19.6	95.9	102.1	25.9	3.1	0.2
서울	1.06	15	1.4	9.8	66.7	99.9	29.3	3.0	0.1
부산	1.02	16	1.7	11.5	69.4	92.2	22.2	2.3	0.1
대구	1.13	14	1.8	14.0	85.0	97.6	20.7	2.2	0.1
인천	1.25	13	1.8	20.9	99.8	96.8	23.8	2.8	0.3
광주	1.26	12	2.2	18.6	101.8	98.8	24.0	2.9	0.2
대전	1.27	11	1.8	17.9	97.6	105.2	24.9	2.7	0.1
울산	1.40	5	2.5	23.3	121.3	105.3	20.4	2.6	0.1
경기	1.35	9	2.1	21.4	106.8	107.0	26.9	3.4	0.2
강원	1.35	10	2.9	25.8	112.6	95.9	25.4	3.8	0.2
충북	1.39	6	2.8	28.8	118.5	97.1	23.8	3.1	0.3
충남	1.50	22	3.3	34.8	132.3	97.5	24.9	3.7	0.3
전북	1.37	7	3.6	28.6	111.8	98.2	25.1	3.3	0.2
전남	1.53	1	4.7	32.0	127.9	106.2	27.1	4.1	0.2
경북	1.36	8	3.6	26.6	115.7	98.6	21.4	2.7	0.2
경남	1.43	4	2.8	27.4	122.5	104.0	22.2	2.7	0.1
제주	1.48	3	2.2	24.9	108.7	114.9	36.1	5.6	0.4

출처 : 통계청, 2007년 출생통계 결과 2008. 8.6 보도자료.

제주 여성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가구가 1980년 26,707에서 2008년 47,037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전국 평균 22.1%를 상회하고 있다는 점이다.

<표2> 성별 가구주 추이

(단위 : 가구, 명, %)

	가 구 ¹⁾	여성가구주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전국순위
				비 율	
1980	105,166	26,707	78,459	25.4	1
1985	118,144	30,263	87,881	25.6	1
1990	131,367	31,675	99,692	24.1	1
1995	146,426	34,387	112,039	23.5	1
2000	157,563	36,866	120,697	23.4	1
2005	179,199	45,502	133,697	25.4	2
2006	180,808	45,670	135,138	25.3	2
2007	183,656	46,390	137,266	25.3	2
2008	186,449	47,037	139,412	25.2	2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각년도, 2006년 이후는 「장래가구추계(2007)」

제주여성의 2007년 경제활동참가율은 71.2%로 전국 평균 62.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취업자의 연령별 구성비에 있어 4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30대(20.8%), 20대(19.6%), 60세 이상(17.0%), 50대(15.6%)로써 지역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정책의 평가와 제3차 여성정책 중기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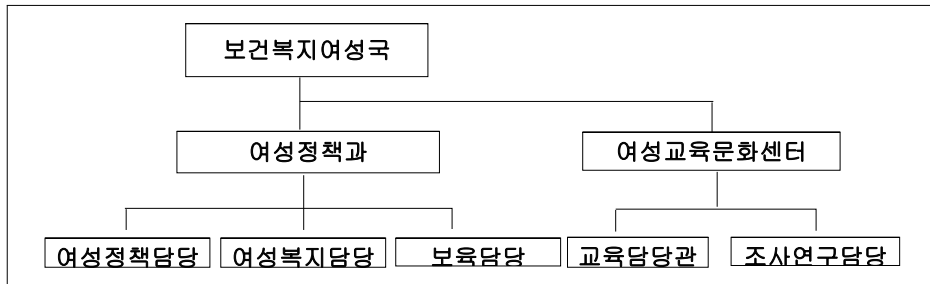
1) 가구

보건복지여성국은 특별자치도 출범이전 1과 3담당 1사업소의 조직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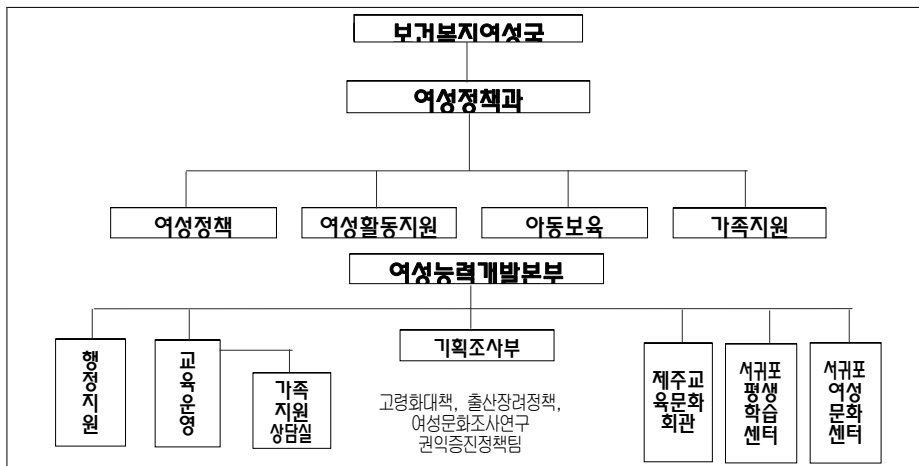
에서 여성정책, 여성활동지원, 아동보육, 가족지원 등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여성 정책의 내실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소의 역할을 대폭 확대·강화하였다. 기존의 여성교육문화센터의 교육과 조사연구 기능에서 기획조사부 강화하였다. 그 밖에 기존 교육센터들을 통합 제주교육문화회관, 서귀포평생학습센터, 서귀포여성문화센터 등으로 교육의 기능을 통합하고, 가족지원상담실을 통해 가족 상담 업무 까지 포괄적인 지원 센터로 영역을 확장하였다.

그러나 지난 2008년 3월 조직개편에 따라 여성능력개발본부가 통합되면서 기구의 변화가 일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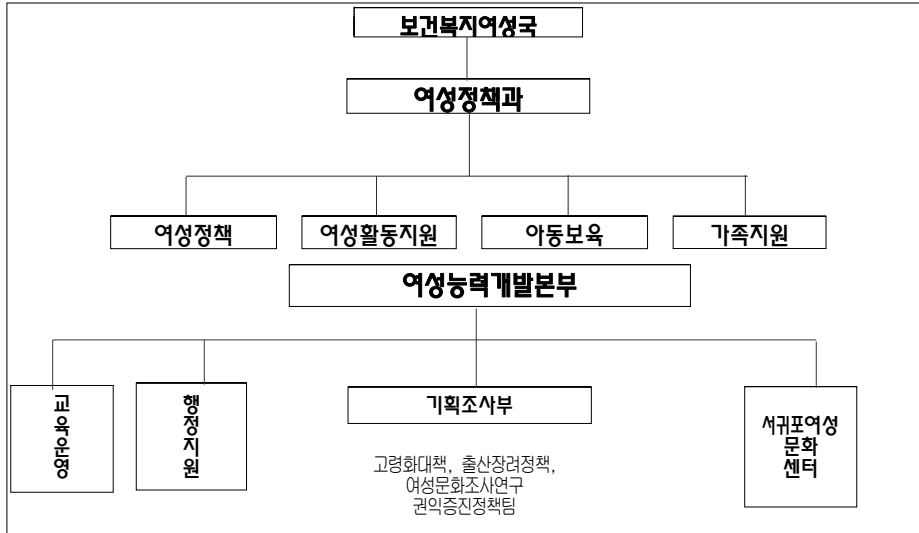
<그림4>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표(2006년7월 이전)



<그림5>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표(2006년 7월 이후)



<그림6>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표(2007년)



<그림7>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표(2008년 3월 이후)



2) 제주특별자치도 제1· 2차 제주여성정책 4개년 계획

제1차 여성정책4개년 계획은 1998년~2002년까지 수립되어 추진하였으며, 6개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였다. 제2차 제주여성정책4개년 계획은 2003년~2007년까지 수립한 것으로 5개 분야 59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총 사업비 115,599백만원의 예산을 4년간 투입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1차와 2차 여성정책 4개년 계획 추진에 있어 제주지역의 현안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중앙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표3> 제1·2차 여성정책 사업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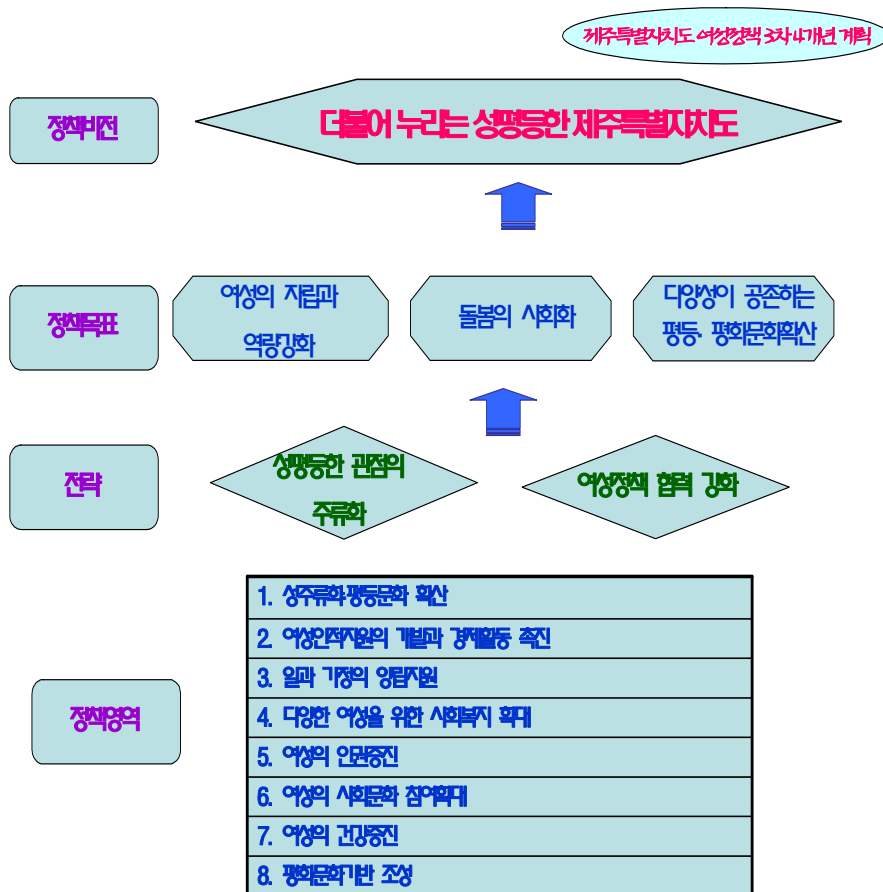
제1차 여성정책	제2차 여성정책
법·제도 및 관행의 개혁과 여성의 대표성 제고 (2개 과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5개 과제)
여성고용의 촉진 및 안정을 위한 지원강화 (6개 과제)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11개 과제)
여성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체계 확립 (3개 과제)	
	여성의 경제적 자립 증진 강화 (10개 과제)
다양한 여성·가정복지서비스의 확충 (6개 과제)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9개 과제)
여성의 문화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8개 과제)	사회·문화분야 여성참여 확대 (8개 과제)
국제협력과 통일에의 여성역할 증대 (2개 과제)	환경·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5대 과제)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4대 과제)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조성 및 의식확산 (3대 과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는 여성정책체성 확립 (4대 과제)
6개 분야 20개 정책과제	9개 분야 59개 정책과제

3) 제3차 여성정책4개년 계획

앞서 2차례의 여성정책4개년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제주도는 행정기구의 변화와 함께 여성특보제도 도입, 여성정책연구전담기구 설립 등 새로운 변화를 계기로 여성정책 수립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지역 여성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거버넌스체제를 구축 여성정책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 상생하는 체감할 수 있는 여성정책 의제 발굴과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그림8> 제3차 제주여성정책 기본구조



기본구조를 바탕으로 전체 8개 영역의 40개 정책과제와 함께 135개의 단위사업을 발굴 4년간 추진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제3차 여성정책 4개년 계획은 실현불가능한 정책을 선정하기보다 추진 기간 내 여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가능한 정책을 선정하는데 주력함으로써 무엇보다 여성정책의 내실을 기하였다는데 강점을 가지고 있다.

<표4> 제3차 여성정책중기 계획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1 성주류화 정책기반 구축· 평등문화확산 (22개 세부과제)	1) 성분석 기반조성	· 성별분리통계
		· 성별영향평가
		· 여성인적자원 자료화
		· 여성정책관련 기초수요조사 확대
		· 제주여성백서 발간
	2) 성인지 예산 도입기반조성	· 성인지 예산 편성을 위한 매뉴얼 개발
		· 민간부분 성인지적 예산 모니터링사업지원
		· 성인지 예산 분석과 성별영향평가 연계
	3)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의 참여 확대	·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확대
		·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확대
	4) 여성정책 협의체구성	· 과장중심의 협의체 구성
		· 협의회 운영의 정례화
		· 협의회를 통한 성인지적 정책수립
	5) 여성정책기구와 지역 여성NGO간 정기적 간담회	· 여성정책기구와 지역여성 NGO와의 정기적 간담회
	6) 성평등교육 활성화	· 공직자 성인지력 향상교육
		· 각종 위원회 위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원 성인지력 향상 교육
		· 국가기관·제주특별자치도 투자기관 및 유관기관 직원의 성인지력 향상교육
		· 도민대상 양성평등교육 실시
	7) 평등생활 문화확산	· 일상의 평등문화 확산
		· 기업의 평등문화 확산
		· 남녀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홍보의 체계화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2 성주류화 성주류화 정책기반 구축· 평등문화확산 (24개 세부과제)	1)제주특별자치도 여성 인력개발 기반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인력개발 기본 계획 수립	
		· 여성능력개발본부, 여성인력개발센터 특성화 및 전문성 강화	
		· 여성평생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	
		· 여성인적자원 DB구축	
	2)맞춤형 여성직업능력 개발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능력개발 기회 확대	
		·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훈련 다양화	
		· 재직여성근로자 직업능력 개발 기회 확대	
		· 소수여성의 특성에 맞는 직업 훈련 개발 실시	
	3)차세대 여성인력양성	· 청소년의 직업·진로지도 강화	
		· 여대생 직업·진로지도 강화	
	4)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지원체계마련	· 여성취업지원센터 운영	
		· 기업의 여성 진출 촉진	
		· 여성창업보육센터 기능 강화	
		· 여성 창업지원 확대	
	5)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여성전문분야 개발을 통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 교육 및 문화 관련 여성 일자리 확대	
	6)여성친화적인 고용 환경 조성	· 여성 사회적 기업모델 구축	
		·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 여성차별 해소	
		·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향상 및 지원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보육+건강가정) (45개 세부과제)	1)공보육 기반 조성	· 여성친화적인 기업·사회문화 조성
			· 중장기 수급계획에 따른 보육 시설 확충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민간보육시설 기본 보조금 지원 및 질 관리			
2)부모의 육아부담경감		· 민간보육시설의 비영리보육 법인화 유도	
		· 0~4세 차등보육료 지원 확대	
		·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및 장애아 무상 보육 확대	
3)다양한 보육서비스제공		· 취업부모에 대한 지원 강화	
		· 시간연장형 보육 활성화	
		· 장애아 보육 활성화	
		· 농어촌 보육시설 지원 확대	
4)보육인력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방과 후 보육프로그램 활성화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내실화	
		·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 및 국가자격증제도 도입	
		·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전문성 제고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3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보육+건강가정) (45개 세부과제)	5)보육환경 및 프로그램 수준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시설 환경 개선 · 지역사회와 연계된 건강·영양·안전관리 체계 구축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지역문화 특성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보육서비스 지원체계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행정 정보화 체계구축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의 활성화 및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보육사업 전국 최고 수범도시를 위한 보육정책 활성화 · 출산장려와 참여하는 보육문화 조성을 위한 “제주삼다공동육아운동” 전개 ·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보센터의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7)가족돌봄의 사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간호 휴직제 도입검토 · 가족형태·돌봄,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 제공자 교육 ·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8)직장·가정의 양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사, 양육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상담·홍보 · 모성보호제도 이용 여건 조성 · 재취업 기회 확대 · 기혼여성대상 직업훈련의 다양화 		
		9)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에 대한 종합적 지원제도 · 한부모가족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체계구축 · 노인 및 장애인 가족의 자립지원 		
		10)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 · 가정폭력 예방 체계 강화 · 가정폭력 피해자 중심의 보호 체계 구축 · 사이버 유해환경으로부터 가족생활 보호 		
		11)새로운 가족관계 및 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문제 예방 체계 구축 · 가족여가문화 활성화 · 가족과 지역사회의 공동체 문화형성 		
		12)가족정책 인프라 확충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지원서비스 인프라 확충 · 가족지원서비스 내실화 		
		4	다양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 (36개 세부과제)	1)여성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노인 정책의 성주류화 · 여성노인 경제기반 마련 · 여성노인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여성노인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4	다양한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확대 (36개 세부과제)	2)여성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 여성장애인 임파워먼트 지원 · 여성장애인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여성장애인 정책의 성주류화		
		3)여성농업인 지위향상	· 양성평등의식 확산 · 여성농업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인정 · 정책결정과정 참여 확대 · 생산자조직 참여 확대 · 여성농업인 단체 활동 지원 · 지역사회 지도자로서 역량강화 · 국제결혼 이주 농촌 여성 적응 지원		
		4)여성농업인 전문인력화	· 여성농업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 후계여성농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 여성농업인의 창업활동 지원 · 여성농업인의 노동생산성 향상		
		5)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 영농도우미 등 인력지원 확충 · 여성농업인센터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충 ·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 보육여건 개선 · 농촌문화 여건의 개선 · 건강증진 시설 확충		
			6)여성농업 정책추진 인프라 구축	· 성인지적 통계수립 · 정책추진 체계 구축 · 여성농업인 정책과제 개발 · 성별영향평가제 도입	
				7)장수어업인 정책	· 장수어업인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장수어업인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 장수어업인 문화 발굴·보존
			8)도서지역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 도서지역 여성 정책과제 개발 · 도서지역 여성의 자기개발을 위한 지원 강화
		9)이주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 이주여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 · 이주여성 적응력 향상 지원 강화		
		5	여성의 인권 증진 (15개 세부과제)	1)여성인권 정책 실효성 증대를 위한 기반마련	· 여성폭력방지 조례 제정
				2)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의식 제고	·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 향상 · 여성이 살기 좋은 동네 만들기 캠페인 · 청소년 성교육 센터 마련
					3)反 성·가정폭력 정책의 내실화

	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
5	여성의 인권 증진 (15개 세부과제)	4) 성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강화	· 여성폭력방지협의체(성매매분야)의 내실화 · 성매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감시활동 · 청소년 성매매 예방 사업 활성화 · 성매매 실태조사 · 성매매 피해자 지원 강화
6	여성의 사회·문화 참여확대 (14개 세부과제)	1) 여성단체 지원과 파트너십 강화	· 여성단체 지도자 교육 · 여성단체 실무자 교육 · 여성 유관기관과 여성단체간 네트워크지원 · 여성 국제교류 협력 · 차세대 여성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2) 여성자원봉사자활동 지원과 전문성 강화	· 여성자원봉사자 전문 프로그램 지원 ·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보장범위 확대 · 여성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전산시스템 도입
		3) 문화예술 정책의 성주류화	· 여성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소외계층 여성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개발 · 여성문화예술인(장르별·활동별)인프라구축
		4) 제주여성사 정립과 제주여성역사전시관 건립	· 제주여성의 역사와 문화정립 ·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전시자료 구축
7	여성의 건강증진 (3개 세부과제)	1)모자보건사업의 강화	· 보자보건서비스의 체계화 · 출산장려 지원 확대
		2)여성환자의 관리정보 체계구축	· 여성관련 질병실태 파악
8	“평화의 섬”에 맞는 평화문화 기반 조성 (6개 세부과제)	1) 평화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 평화교육(인권, 평화, 감수성 향상교육) · 갈등중재 교육 · 여성발전기금 지원 분야에 있어 평화 분야 명시
		2) 제주특별자치도의 평화사업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 도입	· 도추진 평화사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 도입 · 남북교류 사업에 있어서 여성참여확대
		3) 4.3 사업의 성인지적 관점 도입	· 4.3 당시 여성피해 사례 조사 자료집 발간

3. 제주여성정책의 미래를 위한 제언

지금까지 제주여성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제1·2차 여성정책 추진과

제3차 여성정책의 수립과 과제를 소개하였다.

여성정책의 수립은 중앙의 정책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지역 정책의 성주류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7년부터 성주류화를 위하여 기초단계로 성별영향평가의 교육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월과 7월에 걸쳐 총 10기의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통해 성주류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게다가 여성정책 발굴이 각 이해 당사자의 당사자 원칙에 근거 하여 추진함에 따라 적극적인 정책의 발굴로 2008년 영역별 여성정책의 추진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여성장애인 정책에 있어 여성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확대와 도서지역 여성을 위한 교육의 확대 등은 매우 중요한 정책의 전환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여성정책은 여전히 지난하게 정책의제의 발굴과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예산 확보의 어려움과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여전히 낮은 성감수성은 정책 추진에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로 다른 정책적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성감수성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제주여성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을 통해 여성정책을 위하여 새롭게 발굴될 과제를 고민하였다. 결국 지역 여성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은 무엇보다 중앙여성정책과 지역여성정책의 조화에서 성공요인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더욱 다양한 지역여성의 욕구와 그리고 수혜자를 명확하게 하는 노력을 통해 지역 여성정책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통계청. 2008 혼인, 출생 통계

제주특별자치도. 1998~2002 제주특별자치도 제1차 여성정책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3~2006 제주특별자치도 제2차 여성정책중기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07~2010 제주특별자치도 제3차 여성정책중기계획

경기도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의 성과와 과제

박숙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

- 내 용 -

- I 성주류화 전략
- II 경기도의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 III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성과
- IV 여성정책책임관제의 향후 과제

I 성주류화 전략

가. 세계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나. 성주류화 전략의 내용



(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do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itute

여성의 주류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의사결정권을 갖음

젠더관점의 주류화

정책이나 프로그램[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토하고, 정책 내용과 과정 및 결과가 성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함
→ 성인지 정책

주류의 전환

조직의 성별구성이 변화되고, 성인지적 관점이 통합되는 것으로 조직의 구조·문화·제도의 근본적인 전환과 연결됨

다. 한국에서의 성주류화 추진

법적근거 여성발전기본법(1995.12 제정; 1996.7.1 시행)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Gyeonggi Family & Women Development Institute

(1) '여성의 주류화' 법제화(1995.12 제정, 1996.7.1 시행)

제6조 **적극적 조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용 예>

1996~2002 <여성공무원채용목표제> 도입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여성할당제(50%),
홀수번 여성추천, 위반시 등록무효제 도입

(2) '젠더관점 주류화' 법제화(2002.12 개정, 2003.3.12 시행)

제10조 정책의 분석·평가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정책이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적용 예>

2004년부터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도 도입 및 확대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여성부로부터 2008. 5 ~ 2010. 5까지
정책의 분석·평가 지원기관으로 지정 받음

(3) '추진체계의 확립' 법제화(2002.12 개정, 2003.3.12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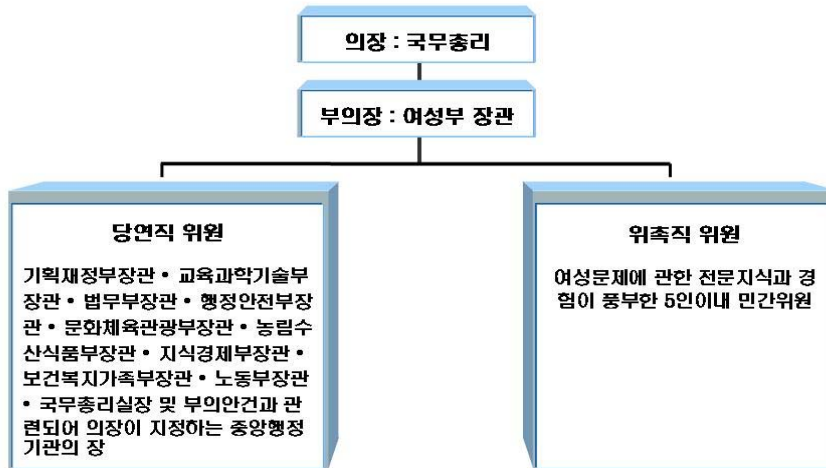
법적근거

- ▶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년 「여성정책조정회의」 「여성정책책임관」 제도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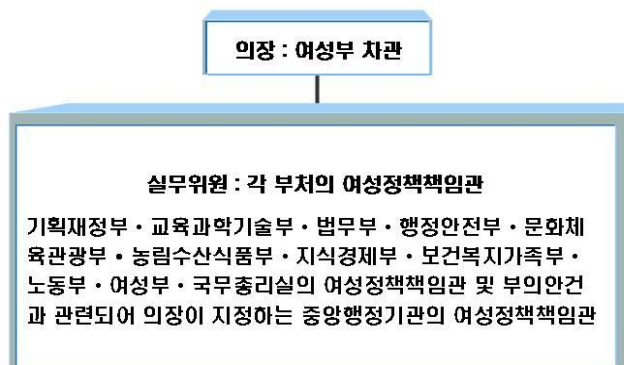
여성정책조정회의 및 여성정책책임관의 위상

- ▶ 여성정책조정회의는 여성정책이 각 부처에서 분산·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각 중앙행정부처의 정책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하고 여성부 장관이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각 부처의 장관으로 구성
- ▶ 여성정책책임관은 중앙행정기관의 기획조정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여성정책책임관으로 지정

여성정책 조정회의



여성정책 실무조정회의



▶ 여성정책 조정회의 기능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

② 조정회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0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II

**경기도의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가. 경기도에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이 갖는 의미

- ❖ 양성평등 구현을 경기도가 선도 : 전국 지자체 중 최초
- ❖ 31개 시·군·간 양성평등 면에서의 균형적 발전 유도

나. 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 현황

- ❖ 2006.12.28일 1차 여성정책조정회의 개최(년2회 개최)
- 2007.5.7 [경기도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 여성정책책임관 : 행정(1)부지사
- 실무책임관 : 도의 실·과장
- 여성정책조정회의 구성 : 의장(행정1부지사), 부의장(기획관리실장)
- 당연직(실·국 원장중에서 20인 이내로 구성)
- 위촉직(도의원 및 전문가 5인 이내)
- 제1 실무조정회의 : 의장(기획관리실장), 부의장(가족여성정책국장)
- 제2 실무조정회의 : 의장(기획행정실장), 부의장(가족여성정책실장)
- ❖ 책임관의 주요역할 : 여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총괄 조정함
- ❖ 실무조정회의는 제1청과 제2청이 나누어 조정회의 전에 개최하되 여기에서 논의된 사항을 여성정책조정회의에서 보고하고 논의함.



여성정책책임관제 도입 성과

정책(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사업 활성화

- 2005년 : 8개 정책 분석(5개는 전문가 심층분석)
- 2006년 : 10개 정책 분석(4개는 전문가 심층분석)
- 2007년 100개 사업 분석(도 41개 과제, 시군 59개 과제, 3개는 전문가 심층분석)
- 2008년 297개 사업 분석(도 76개 과제, 시군 221개 과제, 2개는 전문가 심층분석)
- ※ 심층분석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실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비율(40%)목표 점검 활성화

-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는 각 분야별 여성전문인력 명단을 상시 업데이트하며 도나 시·군에서 요청시 여성위원 후보군 추천(년간 90여명 가량 추천)

경기도 여성정책기본계획, 여성인적자원개발종합계획 등을 조정회의에서 발표하여 각 부서장들이 함께 공유하도록 함.

IV

여성정책책임관제의 향후 과제

- ❖ 여성정책책임관의 투철한 양성평등의식이 가장 중요
- ❖ 년2회의 조정회의 만으로는 형식에 그치기 쉬움
- ❖ 성별영향평가가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환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여성정책책임관의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 성별영향평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감사합니다**
GFWDI

충남 여성정책의 현황과 과제: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황창연(충남여성정책개발원)

1. 들어가며

신정부의 출범이후 여성정책의 기초가 성 주류화로 모아지고 있다. 성 주류화란 용어는 1995년 북경여성대회의 행동강령으로 채택된 이후 국내외 성평등정책의 키워드로 부각되면서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용어가 되었다. 그러나 성 주류화라는 용어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⁵⁾ 성주류화는 사회적 약자로서 여성만을 주대상자로 하던 정책에서부터 여성을 배제하고 차별하는 가부장적 규범과 제도, 조직, 구조적인 사회질서 등을 문제시하며,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김영화, 2007). 때로는 성주류화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 예산과 같은 도구와 절차로 이해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용어가 어렵고 대중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양성평등정책의 중심화, 보편화로 바꾸어 부르기도 했으나 성 주류화나 젠더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김경희, 2006; 김은실, 2008).

이와같이 성 주류화라는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이론적 실천적 의미의 다양성으로 인해 여전히 어려운 일로 남아 있지만 성 주류화의 핵심은 첫째, 주류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고 둘째, 모든 정책과 프로그램에 성평등관점을 통합하며 셋째, 정책시스템과 문화가 성 평등한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

1) 여기에는 성주류화의 개념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인데 실비아 윌비(2008)는 이에 대해 최소 네 가지의 논쟁이 존재함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성평등과 주류화 사이에 놓인 긴장의 특성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주류화 과정에 의해 야기된 성평등 모델의 특성이며 셋째로는 성주류화와 민족, 종교, 나이, 장애 등과 같은 다양한 불평등간의 관계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는 전문성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함

고 있다(Corner, 1999; 김양희외, 2006 재인용). 즉 정책의 모든 영역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외형상 성중립적으로 보이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낳을 수 있는 성차별적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성별에 따라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해가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신경아, 2007).

성 주류화의 의미를 이와같이 이해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정책이 본격적으로 성 주류화를 표방하기 시작한 것은 1998년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면서부터이다. 이후 10년 사이에 여성부->여성가족부->다시 여성부로 변화를 겪는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변화가 있었고 여성가족부로 확대개편되었을 때에는 조직과 예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위상강화의 기대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 여성부의 정체성과 여성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이제 가족과 보육업무가 보건복지가족부로 이관되면서 여성부의 역할은 다시 성 주류화가 핵심과제로 부각되었고 젠더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조정과 개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김양희, 2008).

그러나 이와같은 중앙정부의 조직변화와 정책기조가 지방정부차원에서 얼마나 가능성과 실천성을 지니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지역차원에서는 중앙과 달리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이다. 우선 성 주류화라는 용어조차도 여전히 낯설어 하고, 성 주류화를 모토로하는 여성정책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또한 성 주류화 추진의 근거와 촉매역할을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장치와 조직, 인력 등의 여건이 미흡하고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중앙정부의 업무조직체계와 일치하지 않는 지역도 많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성부 업무의 핵심과제인 성 주류화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얼마나 잘 수행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동안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중앙집권적 발전과정에서 항상 주변적인 위치에 있었으며, 여성 또한 사회발전의 중심에서 배제와 차별을 경험하면서 주변적인 존재로 살아왔다. 따라서 지방화 과정에서 성 주류화가 달성되지 않는다면 지역여성들은 이중의 소외과정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화

실현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통한 중앙에 대한 자치와 정체성의 확립 그리고 지역에서의 성주류화가 달성되어야 하는 것이다(이영자, 1998). 또한 기초단위의 지역이야말로 중앙정부의 정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장이라는 점에서 지역에서의 성 주류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번 지역여성정책 전문가 포럼이 개최되는 것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충남지역 여성정책의 현단계를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비추어 진단해보고, 지방정부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2. 충남의 여성정책 추진현황 :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1) 시행계획의 개요

충남 여성정책의 비전은 “남녀가 함께 하는 행복한 성평등 사회”로 중점과제는 도정의 성 주류화,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 공보육 강화, 다양한 가족지원으로 요약되며, 2008년 충남의 여성정책 추진 현황 및 세부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의 틀 안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충남의 세부사업 및 충남의 특수사업 내용을 관련부서 및 예산 수반여부를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5대 정책과제와 4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나 충남의 경우 44개 세부과제 중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기에 부적절하거나 충남의 여성정책업무부서의 여건에 맞지 않거나 추진하기 어려운 기업여성관리직 확대, 노동시장내 성차별 해소, 돌봄서비스 관리체계 구축, 남북한 여성협력 활성화 등 8개 분야를 제외한 36개 분야의 세부과제와 충남의 자체 특수과제 7개를 포함하고 있다.

<표 1>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충남의 여성정책 추진

계획

1) 국가운영의 주도적 참여

과제 번호	과 제 명	충남 (2008 시행계획)	관련 부서	예산/ 비예산
1-1-1	성별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道 및 市·郡政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추진 및 결과 환류 ○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의 컨설팅 기능 확대 ○ 성별분리통계 생산 활용 촉구 ○ 성별 영향평가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여성가족 정책관실	비예산
1-1-2	성인지예산제 도 기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도 예산편성시 성별영향을 고려할 필요 있는 여성 가족정책관실 소관사업을 선정 시범적으로 추진 	예산 담당관실	"
1-1-3	공무원 성인지교육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정책개발원을 통한 교육 실시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성인지 교육 참석 ○ 지방공무원교육원 통한 성인지 교육 ○ 통계담당자 및 예산담당자 교육, 회의 시 성인지 인식 확산 교육 병행 추진 	여성가족 정책관실	"
1-2-1	여성정책 협의조정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형성 기반 구축 ○ 여성정책조정회의를 통한 여성정책 심의강화 ○ 「충청남도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면개정 준비 ○ 性 정책 잠재력 확대를 위한 정보교류 확대 	여성가족 정책관실	"
1-2-2	시민사회와의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협의회, 여성정책개발원 등 민간 파트너쉽 강화 ○ 특성화된 여성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여성단체 활동 강화 ○ 자아실현 제공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지원 ○ 2008년도 여성발전복지원 사업 추진 	"	예산
1-3-1	공직 여성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시군 5·6급이상 여성관리직 비율 확대 ○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목표를 달성 지속 추진 	여성가족 정책관실 총무 과	비예산

계속

2) 여성의 복지와 인권강화

과제 번호	과 제 명	충남 (2008 시행계획)	관련 부서	예산/ 비예산
2-1-1	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등록 임신부에 대한 건강유지 증진 관리 	보 건	예산

	보건의료서비스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등록 가입기 여성에 대한 모유수유 클리닉운영 : 15개소 ○ 농촌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검진 (골다공증, 갑상선 기능검사) ○ 추진체계 ○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모자보건사업 안내 	위생과	
2-1-2	여성복지 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 위안부 피해할머니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임대주택 우선 입주 	여성가족정책관실	예산
2-1-3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여성장애인 역량강화 사업 : 6개소 ○ 여성장애인 성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	"
2-1-4	여성의 빈곤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취업지원 기술교육실시 ○ 한부모 여성의 자립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안정시책 추진 	"	"
2-2-1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의식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 정례화 : 매년 2월 22일 및 범도민 캠페인 전개 ○ 여성폭력 예방교육 확산 및 내실화 ○ 성희롱 예방교육 방지노치 강화 ○ 성희롱 등 여성폭력 예방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 ○ 찾아가는 어린이 성인형극 순회공연 : 시군어린이집 등 순회공연(50회) 	"	"
2-2-2	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One-Stop 서비스 확대 및 응급보호체계 확립 ○ 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대상별 맞춤 서비스 추진 ○ 취약계층 피해자(장애인, 이주여성 등) 전문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개선 ○ 피해자의 보호·치료 및 자립·정착 지원 ○ 통합적 서비스연계체계 구축 및 정보시스템 강화 ○ 피해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강화 및 처우개선 	"	"
2-2-3	가해자 처벌 및 교정치료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폭력·성폭력 행위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지원 ○ 가정폭력·성폭력 치료·회복 교정프로그램 운영지원 ○ 재발방지 운영 상황에 대한 수시점검 및 지도 	"	"
2-3-1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교육 홍보 ○ 성 릴레이 교육 운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카운슬링 페스티벌』 개최 : 7월 중 해수욕장 피서객 대상 ○ 각종 홍보물 및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 홍보활동 전개 : 홍보물 제작 배포, 소식지 등 활용 ○ 공무원 등 직장 교육 및 공무원교육원 교과목 편성운영 		
2-3-2	피해여성 인권보호 및 자활지원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매매 피해여성 그룹홈 설치운영 ○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 성매매 피해자 피해상담소 운영 ○ 탈 성매매 여성 보호 및 프로그램 내실화 ○ 무료법률 구조사업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 상담소 연계 추진 	"	예산

3)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과제번호	과제명	총남 (2008 시행계획)	관련부서	예산/비예산
3-1-1	성장동력분야 여성일자리 확대 및 제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취업정보센터를 활용 여성 취업지원 ○ 고용촉진훈련을 통한 여성인력양성 ○ 저소득층 여성들의 공공근로 참여 유도 	경제정책과	비예산
3-1-2	기업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망중소기업 및 선도기업 지정육성 추진 ○ 공공 및 정부투자기관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전 참가지원 ○ 여성기업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기업지원과	예산
3-1-3	여성창업자원을 통한 일자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 지원기관과 연계, 각종자금정보지원 ○ 여성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지원 ○ 신용보증지원 	"	"
3-2-2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 어머니 생활체육대회 개최 ○ 생활체육 생활체조대회 개최 ○ 생활체육 댄스스포츠대회 개최 	체육청소년과	"
	근로여성의 전문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농업인단체의 교육운영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단체의 리더십 역량 강화 ○ 여성농업인의 농업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참여 확대 	농업정책과	"
3-2-3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 및 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개발센터 운영 맞춤형 서비스 강화 ○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 취업알선 기능 강화 	여성가족정책실	"

	지원	○ 여성희망일터지원단 구성·운영		
3-3-2	여성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 근무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추진	경 제 책 과	비에산
3-3-3	비공식부문 여성 근로자 보호	○ 저소득층 여성 근로자의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전개 ○ 도 및 시군 등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	경 제 책 과	"

4) 돌봄의 사회적 분담

과제 번호	과 제 명	충남 (2008 시행계획)	관 련 부 서	예 산/ 비 예 산
4-1-1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 영아(만0~2세) 기본보조금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만5세아 무상보육료 및 다자녀 보육료 지원 확대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 여성결혼 이민자가정 보육료 지원	여성가족 정책관실	예산
4-1-2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시간 연장 보육 활성화 ○ 장애아 보육활성화 및 보육이용기회 확대 ○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 농어촌 영유아 양육비 지원	여성가족 정책관실	"
	수요자중심 보육서비스 제공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 업 정 책 과	"
4-1-3	보육서비스 질 향상	○ 평가인증 개요 - 대상시설 :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설치한 도내 모든 보육시설 - 신청기간 : 년 4회 - 평가기관 : 육아정책개발센터(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	여성가족 정책관실	"
4-2-1	가정내 양육지원 서비스 다양화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확대 추진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사업 추진	"	"
4-2-2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사업 추진	여성가족 정책관실	"
	돌봄에 대한 사회서비스 확충	○ 농가도우미 지원	농 업 정 책 과	"
4-2-4	가정내 돌봄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	○ 장애아가족 아동양육 휴식지원사업추진 ○ 가족캠프 등 상시적인 돌봄 스트레스에서 비롯되는 가족간 갈등 해소 및 가족관계 회복·친밀감 조성을 위한	여성가족 정책관실	"

		프로그램 제공 ○ 가족돌봄자에 대한 교육 및 심리 정서적 지원 프로그램		
4-3-1	모성 보호제도 활성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대체인력 활용 지원 및 수요공급 연계체계 구축	총 무 과	예산
4-3-2	남성의 육아 및 가사활동 참여	○ 세부사업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보장 및 활성화 -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 분위기 조성 - 남성의 육아휴직 활용을 제고를 위한 정부·기업의 참여 촉진 -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 확대	여성가족정책관실	비예산
4-3-3	가족친화적 직장환경 조성	○ 기관의 가족친화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가족 친화지수 개발 ○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추진 ○ 가족친화기업 모델개발 및 다양한 정보 제공 ○ 가족 생활 참여를 위한 육아데이, 가정의 날 지정운영	"	"

5)사회통합과 평등문화 정착

과제번호	과제명	총남(2008 시행계획)	관련부서	예산/비예산
5-1-1	남녀가 함께 하는 평등문화 조성	○ 생활속에 5대 평등문화 운동 전개 : 홍보 팝프릿 제작배부 ○ 평등한 가족문화 환경 조성 ○ 가족교육·상담 서비스 다양화를 통한 가족문제 예방체계 구축	"	비예산
5-1-3	양성평등 교육확대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년) 수립 추진 ○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제 도입 ○ 성별영향평가 관련 교육 실시 ○ 공무원 양성평등 교육 확대 실시 : 도 연1회 직장교육과정 연계, 추진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교육 참여 :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	예산
5-2-1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	○ 제12회 전국 주부풍물경연대회 개최 : 2008. 6월중, 당진군 일원 ○ 제17회 전국무용제 참가·지원 : 2008. 9월중, 장소 미정 ○ 제34회 충청남도합창경연대회 개최 : 2008. 7월중, 장소 추후 결정	문화예술과	"
5-2-2	여성결혼이민자	○ 2009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DB구축 추진	여성가족부	"

	의 사회통합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확충 운영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행복가꾸기 사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방문교육사업 추진 ○ 여성결혼이민자가족 영유아 무상보육료 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족 정 책 관 실</p>	
5-2-3	이주여성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한글교육 실시 ○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활성화 ○ 이주여성을 위한 여성 긴급전화 「1366」 운영 	"	"

6) 특수과제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충남(2008 시행계획)	관련부 서	예산/ 비예 산
특수 과제	여성발전복지지 원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 업 량 : 40개단체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발전복지지원사업 계획 공고 : 2007. 12. 27 - 사업설명회 개최(2008. 1월) 및 사업계획서 접수 (2008. 2월) - 대상사업 선정(2008. 3월), 사업추진상황 점검(7~10월), 사업평가(11~12월) 	"	예산
"	제8회 유관순 상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관순상 심사위원회 구성 : '08. 1~2월 ○ 유관순 햇불상 수상후보자 워크숍 개최 : '08. 1~2월 ○ 수상대상자 확정 ('08. 2월말) · 발표('08. 2. 29), 시상식 개최 ('08. 3. 31) ○ 제8회 유관순상, 유관순 햇불상 시상계획 공고 : '08. 2월 ○ 제8회 유관순상, 유관순 햇불상 수상후보자 접수 : '08. 12. 3 	"	"
"	도정신문 주부명예기자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기자로서 議·道政 홍보 분위기 확산 ○ 연찬회 개최(2회) : 취재 및 송고 요령 등 기자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 시·군 임원단 회의 정례회추진 : 분기별 1회(년 4회) 	공보관실	"
"	여성 정보화능력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정보화교육 참여확대 ○ 도민정보화 축제 인터넷경진대회 개최시 여성참여인력의 비중 확대 	정보화 담당관실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영유아 무상 보육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가족의 0세~5세 아동 ○ 사 업 량 : 1,300명 정도 	여성가족 정책관실	"
"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여성결혼이민자 및 가족('07. 12. 31 현재 3,048명) 	"	"

		○ 지원기준 : 시군별 여성결혼이민자 수에 의거 예산 배분지원 ○ 사업내용 : 11개영역 31개 사업		
"	여성과 장애인을 위한 공중 화장실 확대 설치	○ 다중 집합장소 등 선정, 주변 경관과 지역 특색에 어울리는 테마가 있는 명품 화장실 신축 ○ 사업기간 : '08. 3~10월 ○ 사업량/사업비 : 17개소 ○ 추진내용 : 여성 변기 수는 남성 변기 수의 1.5배 이상 설치,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시설은 설계자문 의무화	수 질 관 리 과	"

2) 주요특징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차이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우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1-1)가 강화되고, 일-가정 양립 항목(4-3)이 주요 정책과제로 도입된 점을 꼽을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차원에서는 세부사업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의 여성정책 기조에 준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예산편성의 비중으로 미루어 볼 때 현실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여성정책 사업의 가장 큰 비중은 보육과 가족지원사업임을 알 수 있다. 충남의 경우 2008년도 본 예산 편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육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고(여성가족정책관실 전체 예산의 90.25%), 다음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5.91%) 모부자가정을 포함하여 결혼이민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도 충남의 여성정책사업 추진과 관련된 주요 성과와 타 지역과의 차별적인 사업운영 내용을 주목한다면 우선 지자체 출연연구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성별영향평가 분석지원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도 및 시군 정책의 성 주류화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구심점을 갖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 지원사업과 별도로 '여성결혼이민자 행복가꾸기 사업'이 11개영역 31개 사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시군에서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자체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단위 사업으로는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이

바지한 여성을 발굴하고 그 정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제7회 유관순상을 운영하였다.

3) 시사점

그러나 <표 1 >에 제시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충남의 세부사업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충남의 성 주류화 추진을 위해서 극복되어야 할 몇 가지 한계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첫째, < 표 1>에 제시된 세부과제 43개 중 여성정책전담부서 사업이 63%로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부서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분야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 발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현재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중 2008년도 추진계획사업으로 타 부서와 관련된 것은 전체 세부과제 항목 중 약 37 %를 차지하며, 직접적으로는 예산담당관실, 총무과, 보건위생과, 농업정책과, 경제정책과,기업지원과, 체육청소년과, 문화예술과, 공보관실, 정보화담당관실, 수질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때와 비교하면 여성정책관련사업이 더 많은 부서로 확산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충남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물성적인 영역으로 간주되는 도로, 교통, 건설분야에 이르기까지 여성정책과의 관련성을 도정의 모든 분야에 폭넓게 반영하고 확장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5대 여성정책과제 중 여성의 경제력 역량강화 영역에서만 타 부서의 참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읽을 수 있다.

둘째, 예산유무에 따른 사업의 성격이다.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충남의 시행계획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중 비예산 사업이 20% 남짓 된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의사결정 참여확대, 여성근로자 차별해소 및 보호, 일-가정 양립 등의 분야에서 비예산 사업이 계획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산은 정책의 구체적 의지를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사업의 효과성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비예산사업의 예산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의

세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발굴 및 예산 배정이 요구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비교하여 보다 강화되거나 새롭게 도입된 영역의 사업들이(국가정책의 성 주류화, 일-가정 양립 등) 비예산 사업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성과에 대한 우려를 갖게 한다.

셋째, 현재 충남의 여성정책관실 사업 중 가장 큰 예산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보육과 가족업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여성부의 조직개편에 따라 지방의 여성정책담당부서에서도 사업의 범위와 총괄내용에 있어서도 변화가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보육과 가족관련 업무가 타부서로 이관될 경우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도정의 성 주류화이고, 이를 위해 여성정책부서가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충남의 성 주류화를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 분석과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도록 한다.

3. 충남의 성 주류화 기반분석

성 주류화는 모든 분야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젠더이슈를 고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책결정에 관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이 모든 정책의 매 단계 매 수준에서 성평등의 관점이 녹아들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Sylvia Walby, 2007 재인용).

그러나 성 주류화를 실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과 분석도구들이 필요하다. 민경자(2004)는 성 주류화의 기반으로 1)법 및 종합계획, 2)추진기구, 3)재원(예산 및 기금), 4)성인지적 관점, 5)성인지 정책도구, 6)연구기관, 7)여성단체의 7가지 분야를 제시하였고, 독일 Genderbuero 대표인 Regina Frey(2008)는 성 주류화가 작동되기 위한 네 가지 도구로서 1)문제를 노출시키기 위한 분석도구, 2)인식제고와 정보전달을 위한 교육도구, 3)자문 및 참여도구, 4)법적도구를 제시하였다.

이는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첫 번째 중점 정책과제(국가 운영의 주도적 참여)로 제시되고 있는 세부과제 즉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 성인지 예산제도 기반, 공무원성인지 교육, 여성정책협의조정, 시민사회와의 협력, 공직 여성참여확대라는 성 주류화의 기본 인프라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충남의 성 주류화 기반을 이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범주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성인지 예산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에서 자료 확보와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기반으로 1) 법 및 종합계획 2) 추진기구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4)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5) 성별영향평가 6) 여성단체 및 관련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 및 종합계획

성 주류화의 시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법적 도구이다. 법적 도구들은 성 주류화의 포괄적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 수단, 집행 등과 관련된 방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충남의 여성가족정책 관련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충청남도여성발전기본조례」

-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등 여성 관련 법령과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 여성 및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제반 여성정책사항과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복지기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2007년 1월 제정되어 2008년 3월 일부 개정이 되었다.

②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양성평등의 촉진 등 여성발전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자문과 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의 심의

와 충청남도 여성 발전복지기금운용관리의 심의를 위하여 2003년 6월 제정이 되었다.

③ 「유관순상운영및지원조례」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1년 7월 제정되었다.

④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01년 11월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다.

⑤ 「충청남도영유아보육조례」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가 영유아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며,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제정되었으며 2007년 1월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상 충남의 여성정책관련 조례를 소개하였는데 이들 조례가 도정의 성 주류화를 이루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는 조례의 세부 내용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추진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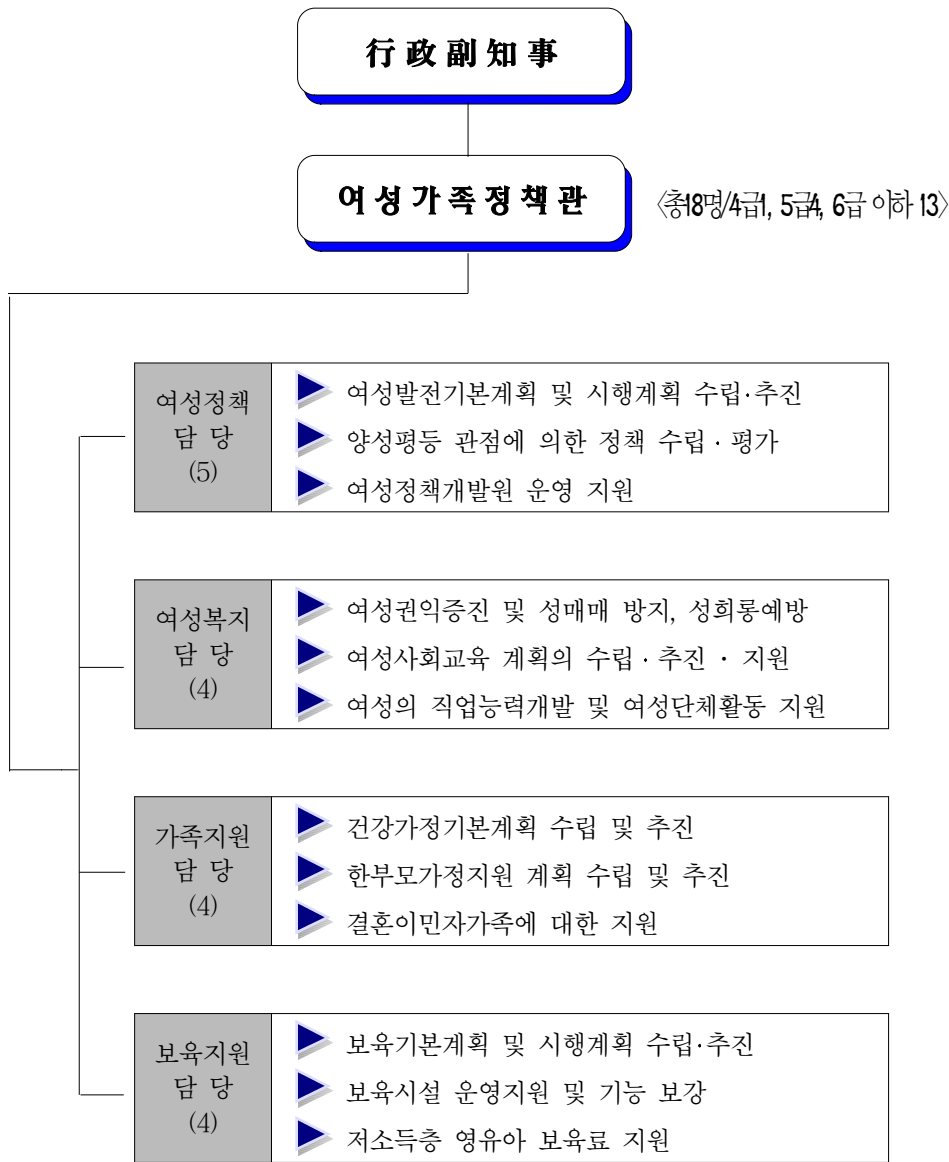
① 총괄부서

여성정책의 주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분야별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하며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낼 정도로 그 위상이 높아야 한다(민경자, 2004).

충남의 경우 이러한 역할을 하는 부서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이고 직제상 부지사 직속으로 되어있다. 여성가족정책관실은 1998년 민선2기 시작과

함께 새로이 신설된 부서로 2004년까지는 주로 여성복지 및 여성사회참여 정책 중심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다가 중앙의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라 2005년 이후 보육 및 가족관련 업무를 맡게 됨으로써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현재 충남의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규모 및 업무내용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여성가족정책관실 조직규모 및 업무내용

자료: 2007 충남여성백서. 충청남도. 243

2007년 기준 여성가족정책관실은 1명의 4급 정책관과 5급4명, 6급 이하 13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성정책 주류화를 담당할 인력은 총 18명(전체 공무원 16,044명의 0.12%)이고 실제로 정책을 총괄하는 인력은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소수 인원에 불과하다.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시도하고 있듯이 각 실국별로 여성정책 실무책임관을 지정하여 도정 전반에 성인지적 관점이 반영되고 통합되도록 하는 제도적인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② 조정기구

현재 여성정책 및 성평등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는 여성발전위원회이다. 여성발전위원회는 2003년도에 종전의 '충청남도여성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 여성문제에 대하여 건의·심의·자문역할을 해온 '여성정책심의위원회'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발전복지기금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하였다.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 여성정책에 관한 사항의 자문과 여성발전복지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 6인, 위촉직 위원 15인으로 임기는 2년이다(충남여성백서, 2007).

현재로는 유일한 여성정책 협의조정 및 심의기구이지만 주로 여성발전복지기금운용관리와 관련된 심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도정 전반에 걸쳐 성인지적 관점의 정책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중앙이나 타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어려움이 있다. 이와같은 이유로 충남에서는 2008년부터 여성정책협의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여성정책조정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오늘 발표하는 경기도 사례(여성정책책임관제 운영의 성과와 과제)는 이와같은 여성정책조정기구의 실질적인 성과와 한계,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공무원 성인지 교육

정책에서의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을 입안 실시하는 주체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한다. Regina Frey(2008)도 성 주류화의 주요도구 중 하나로 공무원 젠더교육을 제시한 바 여기에서는 그동안 이루어진 충남의 공무원 성인지교육 현황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찾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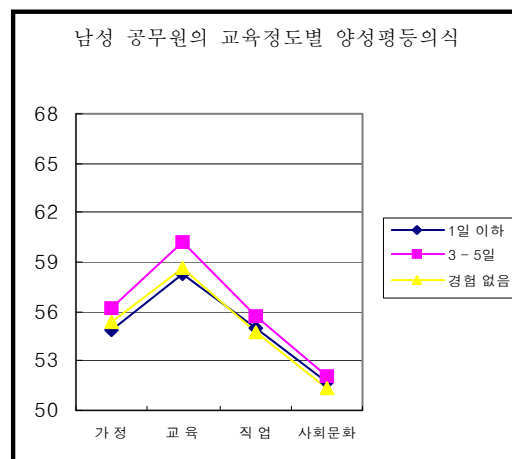
충남에서는 2003년도부터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으며, 주로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표 2>는 도내 주요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인 충남 여성정책개발원과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이루어진 양성평등교육과정 운영 실적으로 양성평등교육을 위하여 적어도 1일 이상의 독립교육과정을 운영한 경우이다.

<표 2> 충남 공무원 성인지 교육 운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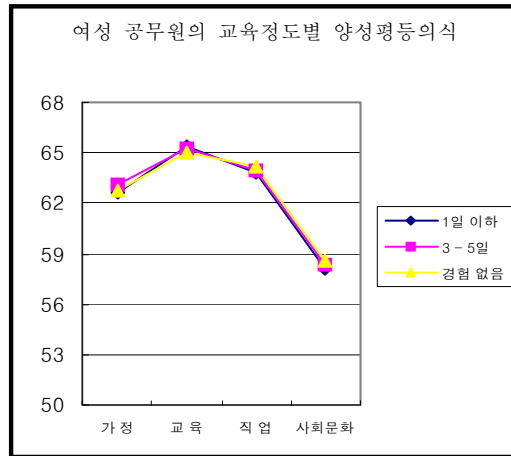
연도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충남 지방공무원 교육원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원(명)	교육과정명	교육시간	인원(명)
2003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1일 과정	118	-	-	-
	남녀공무원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3일 비합숙	74	-	-	-
2004	공무원 양성평등교육과정	5일 비합숙	81	양성평등의식 향상과정	5일 비합숙	45
2005	공무원 양성평등교육과정	5일 비합숙	58	-	-	-
2006	공무원 양성평등교육과정	5일 비합숙	42	-	-	-
	성인지 정책 형성과정	5일 비합숙	15	-	-	-
전체	433(명)					

자료: 황창연(2006). 충남 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과제. 38

이밖에도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각종 교육과정 중에 소양과목 형태로 양성평등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기는 하지만 1-2시간 정도의 일회성 강의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황창연(2006)의 연구결과에⁶⁾ 의하면 양성평등교육을 경험한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수준이 교육 경험이 없는 사람보다 평균점수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교육기간에 따른 양성평등의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의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남성공무원의 경우 교육의 효과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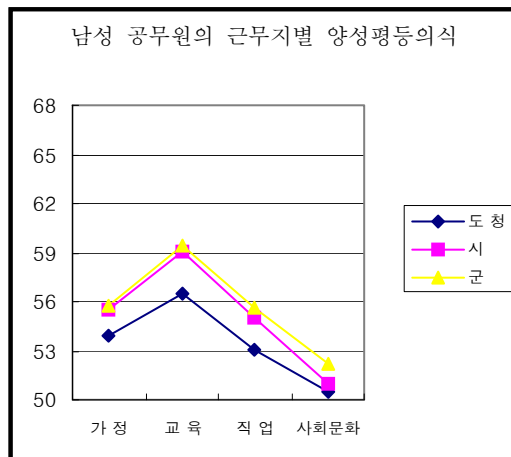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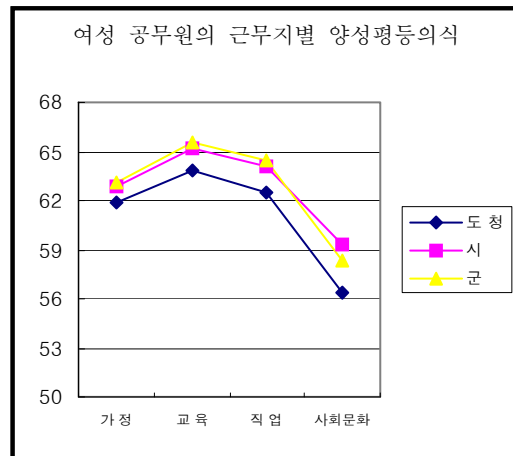
6) 2003년 이후 본원 교육수료자 및 일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전체 표본규모는 705명 임(남성 47.2%, 여성 52.8%, 교육경험자 51.4%, 무경험자 48.6%) 검사지는 2002년 조사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동일하게 사용



<그림 2> 충남 공무원의 성별·교육경험별 양성평등의식(2006)

또한 주목할것은 광역단위와 기초단위 공무원의 양성평등의식 차이이다. 광역단위 공무원의 양성평등교육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령집단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시·군 공무원보다 양성평등의식이 낮았다.





<그림 3> 충남 공무원의 성별·근무지별 양성평등의식(2006)

한편 교육수료 이후 현장에서의 성인지정책수립이나 집행을 위한 적용여부에 대해 알아 본 결과 의식향상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었지만 업무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인 적용하고 실천하는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모든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관점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교육기회의 양적인 확대가 매우 중요하지만 연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성, 근무지역, 연령, 교육기간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수요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과정이 더 세분화되거나 다양해질 필요성이 있다.

4) 여성의 정책결정과정 참여

정책의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성인지 관점 교육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이나 부서장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 없이는 성인지 교육이 활성화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정책의 성 주류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이 참여하여 여성의 시각을 반영하는 것도 보완책의 하나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참

여하는 주요 여성층으로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여성의원,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살펴보도록 한다.

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충남의 2007년 여성공무원 비율은 27.0%로 2002년 21.7%에 비해 지난 5년 동안 5.3%가 증가하였다. 2005년 25.4%로 매년 약 1% 정도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여성공무원 비율은 전국 평균 여성공무원 비율과 비슷하다.

그러나 5급 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3.9%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7.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는 5급 공채 임용이 거의 없이 내부승진에 의존하는 지방공무원의 특성상 5급 이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의 한계와 관리직 승진대상인 6급 여성공무원의 인적자원이 부족,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확대에 대한 자치단체의 적극적 관심 부족 등을 들 수 있으며, 도에서는 앞으로 임용 목표율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충남여성백서, 2007). 이와같은 맥락에서 충남은 2008년 하반기 처음으로 3급 여성 공무원이 배출되었고 여성 공무원의 승진, 배치는 도정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충남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관리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더욱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서는 기획, 감사, 인사 등 주요부서에 여성공무원의 비율을 높임으로서 여성의 관점이 반영되고 영향력을 증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표 3> '07년 충남 관리직 여성공무원 현황

구분	전체 공무원			5급상당 이상 공무원			6급이상 공무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명)	여성(명)	비율(%)
전체	275,484	78,855	28.6	18,959	1,349	7.1	65,674	7,741	11.8
충남	16,044	4,324	27.0	1,089	43	3.9	4,156	375	9.0

자료: 행정자치부(2008). 통계로 보는 지방자치단체 여성공무원 현황

※ 5급이상 : 5급상당(일반, 별정, 계약직가·나급 포함) 이상 / 6급이상 : 5급이상+6급 일반직(연구·지도직 제외)

〈표 4〉 충남의 기획·감사·인사부서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 : 명, %)

구분	합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국	28,268	6,727	23.8	1,581	338	21.4	1,256	253	20.1	1,665	359	21.7	1,559	193	12.4
충남	1856	356	19.2	107	11	10.3	81	11	13.6	158	21	13.3	81	7	8.6

자료 : 충남여성백서(2007). 180

② 여성의원

- 여성의원은 여성의제를 지방의회에 가져가고 정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 주류화 실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충남의 2006년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자 수는 광역단위에서 4명, 기초 자치단체에서 22명 총 26명으로 전체 지방의원의 11.2%이지만 지역구로 당선된 여성의원은 3명 뿐이다. 여성의원들이 여성정책수립과 예산집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30% 정도의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수가 증대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의원들의 성인지적 관점 여부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와같은 이유로 충남에서는 여성정치대학 및 여성위원연찬회, 여성의원 워크숍 등을 통해 여성정치지도자들의 성인지적 관점 형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표 5〉 2006년 충남지역 지방의회 여성의원 당선현황

(단위 : 명, %)

	전체의원	여성의원	광역의원		기초의원	
			지역구	비례대표	지역구	비례대표
2002	245	5(2.04)	1	3	1	-
2006	232	26(11.2)	1	3	2	20

자료 : 충남여성백서(2007).

③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2006년 자치단체별 전국 위원회 수는 총 1,069개이고 여성위원 비율은 35.3%이다. 충남의 경우 여성위원은 289명으로 38.0%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중앙에서 권장하는 여성위원 40%에 근접하고 있지만 여성위원들의 실질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는 미지수이다.

〈표 6〉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현황

(단위 : 명, %)

구 분	위원회 수	위 측 직		
		위 측	여 성	참여율
전 국	1,069	12,226	4313	35.3
충 남	57	760	289	38.0

* 자료 : 충남여성백서(2007). 180

5)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주류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도구이다(김양희, 2007; 김경희, 2006). 정책입안 및 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9개의 지표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시범분석이 이루어졌고 지자체 수준에서는 2005년에 도입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충남에서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는 <표 7>과 같다. 여기에는 심층과제가 6개 포함되어 있으며,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과제 선정 분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진 과제는 2005년은 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비롯하여 녹색 농촌체험마을, 도민정보화교육 등 여성정책부서가 아닌 타 부서의 업무가 분석 대상이 되는 반면, 기초단위의 경우 한부모 저소득 가정, 결혼이민자 센터 운영,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대부분 여성정책부서 혹은 인접한 부서의 사업이 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별영향평가지침에 제시된 우선순위 사업보다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과제 수행이 용이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과제선정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 충남의 광역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과제선정과 같은 체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충남 광역단위에서의 성별영향평가사업 선정 및 추진체계를 보면 먼저 여성가족정책관실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5-10개정도 추천을 받은 후 실국장 수요모임에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여성정책팀장급이 참석하여 제안 설명한 후 토론을 거쳐 결정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별영향평가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해 충분한 공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희망하는 부서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이와같은 형식적인 절차는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관심과 홍보 효과가 있다고 보아진다.

이와같은 절차를 통해 선정된 과제는 지표에 따른 성별 차이를 비교적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었고 질적으로는 심도있는 분석이 이루어져 2005년 이래 성별영향평가 사업에 대해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다.

<표 7> 연도별 성별영향평가 과제 수

	전체	2005	2006	2007	2008
광역단위	13	1	2	2	8
기초단위	94	-	10	24	60
전체	107	1	12	26	68

그러나 그동안 이루어진 성별영향평가 결과의 환류 상황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성별영향평가 사업을 의무적인 처리업무의 일환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의지까지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둘째 지자체 성별영향평가사업의 추진주체는 여성정책부서이지만, 평가주체는 해당 실과 업무 담당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여성정책업무 부서의 공무원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환류 실적이 미약할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의지를 갖고 환류계획을 세웠어도 잦은 부서이동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는 구조적인 문제로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과장급 이상에서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성별영향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별분리통계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충남에서는 1999년부터 여성통계를 생산하고 있으며 격년으로 출간하고 있다. 그러나 간행된 여성통계가 얼마나 실제 업무에 활용되는가 하는 것은 의문이며, 시책 입안시 이 통계가 활용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6)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

이상 앞에서 살펴본 내용은 성 주류화의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도구라면 이밖에 정책의 성 주류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기본 인프라로써 여성단체 및 연구기관의 중요성을 꼽을 수 있다.

여성단체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이슈를 발굴하여 여론화시키면서 새로운 정책개발의 단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계획된 정책이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모니터하고 협조해야 한다. 특히 여성부서의 상대적 약함을 지역여성단체가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민경자, 2004). 왜냐하면 앞서 언급하였듯이 여성부서를 제외한 부서에서는 아직 성인지적 관점이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있어 여성을 고려하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직적으로 힘이 약한 여성부서가 타 부서의 협조를 견인하여 성 주류화를 이루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단위에서는 무엇보다 여성단체와의 파트너십이 중요하다.

그러나 성 주류화를 위한 정부기구와 여성단체간의 협력체계, 즉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에서 파트너십의 대상인 여성단체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또 협력관계내용을 어떻게 형성해갈 것인가 하는 기준에서 충남의 여성단체활동을 평가한다면 다소 아쉬움이 있다. 왜냐하면 충남의 경우 현재 여성단체의 성격이 다양하지 못하고 여성단체협의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08년 현재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등 13개 도단위 여성단체협의회가 있고 미가입단체가 8개이며 회원규모는 약 25만여명이다. 이들 여성단체들이 주요한 도 행사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여성운동단체만큼 성차별, 성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지자체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정책모니터링을 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2001년 충남의 여성전문가 중심으로 만들어진 ‘충남여성포럼’은 연 4회 지역여성 현실에 대한 현상진단 및 정책제언을 중심으로 세미나, 워크숍을 진행함으로써 또 다른 대안적인 여성단체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타 지역과 달리 여성운동성격을 띤 단체가 거의 없다는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한편 지역의 여성단체 이외에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한 또 다른 기반요소로 연구기관을 꼽을 수 있다. 즉 분야별 여성사업을 개발하고 정책시행 전에 성별영향평가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성 주류화 정책의 씽크탱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충남은 경북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여성정책연구기관을 설립함으로써 개발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으로 여성정책연구를 수행할 기구가 있어야 한다.

2008년도에는 도 출연기관인 충남여성정책개발원이 성별영향평가센터로 지정됨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사업 등 충남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4. 충남의 성 주류화 실현을 위한 과제

이상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따른 충남의 여성정책 추진계획과 성 주류화를 위한 기본 인프라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지금까지의 분석내용을 기초로 충남의 성 주류화 촉진을 위한 우선적인 정책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 주류화의 추진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즉 성 주류화 정책을 총괄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위상이 낮은 현실에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행정부지사가 총책임관이 되고, 실·국장이 위원이 되는(혹은 경기도와 같이 과장급을 여성정책실무책임관으로) 여성정책조정위원회가 새롭게 구성, 운영되거나 현재의 여성발전위원회를 기획관실 정책조정부서로 옮김으로써 실질적으로 타실국의 협조를 이끌어내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도정의 모든 분야가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립,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혹은 성 주류화 업무를 공식업무로 지정하여 국별 주무과 주무계의 업무분장에 명시하고 국별 주무과장을 성 주류화 책임담당관으로 지명하여 이들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연 1회 정도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런 작업 역시 지방정부가 스스로 하기는 어렵고 행자부에서 지침을 내려 시행케 해야 한다(민경자,2004). 특히 앞으로 성별영향평가 결과환류 및 성인지 예산보고서 작성 등이 구체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조정기구의 역할강화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현재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자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업무추진체계가 없다면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환류되어 정책입안에 반영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성 주류화가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 못지 않게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성인지정책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의 이루어진다면 정책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성주류화가 훨씬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지역에서 거의 의무적으로 수행되는 성별영향평가사업도 업무담당자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무원의 성인지 교육은 장기적으로 도정의 성주류화를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1-2시간의 교육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또 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별, 근무지별 특성에 따라 교육성과가 달리 나타났던 점을 고려할 때 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체적인 사업을 통한 성 주류화 사례 구축이 필요하다. 성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성별영향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성주류화의 사례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중요하다. 기반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하는 일은 의식의 변화를 수반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와같은 이유로 의식이 변하여 부서에서 자발적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사업을 입안, 추진하기를 기대하는 것보다 좋은 사례를 만들어 내고 그러한 사례에서 부서와 담당자, 그리고 지자체가 상생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타 부서에 성주류화를 독려하고 추동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기반의 문제와 제도의 문제를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해 내고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민경자, 2008).

이상 제시한 내용은 사실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있을 때 가능하며 공직사회의 특성상 단체장의 특별한 의지가 아니면 성주류화는 이루어지기 힘들다. 특히 전통적인 가부장성이 강한 충청지역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을 지역의 여성단체가 수행하는데 여성운동단체가 없는 충남의 경우 지자체 성인지 예산을 촉구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정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따라서 충남은 무엇보다 지역의 여성단체를 키우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밖에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여성발전기본조례나 여성통계에 대한 홍보와 활용이 필요하고 특히 성별영향평가 등 성 주류화의 기초자료인 행정통계의 성별분리가 이루어지도록 각 부서별 행정보고양식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중앙차원에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희(2006). 여성정책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 한국 젠더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219-252.
- 김경희(2007). '성 인지적 지역개발과 정책방향' 여성들의 삶의 관점에서 본 한.중지역 여성정책. 계명대학교 출판부 47-82
- 김영화(2007). '대구광역시 정책의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 및 성 주류화 방안'. 성 주류화 정책 패러다임의 지역 정착방안 모색. 2007대구국제여성심포지엄 자료집 .85-102
- 김양희(2008). '한국의 성주류화제도와 과제'. 국제사회의 성주류화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국제학술심포지엄자료집 163-177
- 김양희외(2006). '국가균형발전모델의 성 주류화 전략개발: 성 평등한 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한국여성개발원.
- 김은실(2008). 여성정책과 페미니즘에서의 성 주류화. 국제사회의 성주류화동향과 한국의 여성정책 전략.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95-109
- 민경자(2004). 지방자치단체 성주류화 기반분석 및 여성부와의 연계방안. 컨퍼런스 자료집.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 민경자(2008). 대전·충청권 성주류화 현황 및 사례.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한국여성개발원

- 신경아(2007). '성주류화와 성별영향평가'. 경기가족여성 창간호. 1-10
- 실비아 월비(2008). Gender Mainstreaming in Theory and Practice. 한국여성정책 연구원 개원 25주년 기념 국제 학술 심포지엄 자료집 p11-29
- 이영자(1998). '지방화: 여성주체의 미래사회를 위하여' 지방화와 여성. 미래인력연구센터
- 충청남도(2008). 여성가족정책관실 내부자료
- 충청남도(2007). 2007충남여성백서
- 황창연(2006). 충남공무원 양성평등교육의 성과와 과제.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3분기포럼

전북여성정책의 새로운 방향 및 과제

전북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장
도 세 란
2008.8.28-29 제주발전연구원

C CONTENTS

1. 서론
2. ISSUE1
3. ISSUE2
4. 현황
5. 결론

1 핵심주

❖ 여성정책의 주제와 영역 확장

❖ 생활 속의 여성정책 전개 필요
예)저 탄소 녹색성장

2 HOT ISSUES

➢ 지역의 여성 친화적 기업발굴 및 확대
- 여성친화지수(WFI)개발·보급

➢ 지역 성장 동력 산업에서의
여성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정책추진 :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연계

전라북도의 현황

4대 핵심동력산업에서의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기대됨.

- 식품산업
- 자동차부품산업
- 신재생 에너지 산업
- 문화관광산업

1. 여성친화적 기업발굴 및 확대

- 저출산 고령화 시대
- 비정규직
- 일과 가족의 양립

2. 여성인적자원

여성인적자원의 개발 및 활용 필요

- 식품산업
- 자동차부품산업
- 신 재생 에너지 산업
- 문화관광산업

(1) 식품산업

1. 식품산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활발
[육 가공, 발효식품 등]

- 전북 : - 국가식품산업클러스터로 선정
- 새만금 : 식품전용항만 설치 예정

[2] 자동차 부품 산업

2. 자동차 부품 산업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유망
[성실함, 섬세함, 꼼꼼함]

- 현대자동차
- 타타대우상용차
- GM 대우

[3] 신재생 에너지 사업 [저탄소 녹색 성장]

- 풍력, 태양광, 바이오, 연료전지분야 등 :
- 여성인력의 개발이 필요
- 논의: 생활 속의 정책 전개 필요

예) 저탄소녹색성장

“녹색성장은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뿐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

[4] 문화관광 산업

1. 문화산업

- 전북 - 전통문화 (판소리 등) 중심.
문학, 음악, 영화, 미술, 게임, 방송미디어,
공연예술, 출판, 건축 등

2. 관광산업

- 음식업, 숙박업, 카지노, 여행업, 교통운수업,
유원지 시설업, 관광객이용시설업(기념품점) 등

요 약

- 여성정책의 주제와 영역 확장
- 지역의 성장동력산업과의
conversioning

- 생활 속의 여성정책 전개
- 지역여성 들과의 공동협력사업 추진



THANK YOU

memo